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행정학 석사학위논문

원조 이념에 따른 공적원조규모 비교연구

2016년 2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행정학 전공
조 문 영

원조 이념에 따른 공적원조규모 비교연구

지도교수 이 석 원

이 논문을 행정학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5년 9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행정학전공

조 문 영

조문영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5년 12월

위 원 장	최 종 원	(인)
부위원장	금 현 섭	(인)
위 원	이 석 원	(인)

<국문 초록>

본 논문의 목적은 원조 이념에 따른 공적원조규모 및 그 구성에 대한 비교 연구를 통해서 선진공여국들 사이 원조이념별 원조규모에 관한 전략과 그 구성을 통한 원조정책에 대한 분석을 하는 것이다.

제한된 자원으로 원조를 배분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과 관련하여, 우리나라가 선진공여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또는 현재 선진공여국의 표본인 DAC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공적개발원조 규모를 여전히 더 늘려야 한다는 것이 정설이다. 그러나 이러한 OECD 기준 규모가 우리나라에게 적정한 규모인지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즉, DAC의 ODA 기준 규모가 우리나라의 전반적 상황에 비추어보아 반드시 적절한 규모라고 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사회적인 합의나 학문적인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DAC의 기준을 만족하기 위해 ODA를 대규모 늘리고 있지만, 자원이 한정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무한정 ODA를 늘릴 수는 없으며, 적절한 원조 전략을 가지고 적정량을 책정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원조 규모와 관련하여 적절한 원조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전반적 상황을 고려해야할 뿐만 아니라, 원조를 오랫동안 진행해온 선진 공여국들의 원조 모델에 대해 충분한 연구 역시 필요할 것이다. 선진 공여국이 어떠한 기준으로 원조규모를 결정하고, 어떤 기준으로 섹터별 원조를 배분하는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나아가야할 원조 배분 방향성 및 규모결정에 대한 전략을 세우는데 도움이 될 만한 시사점을 도출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선진 공여국의 원조배분과 관련하여 원조규모결정요인 중 특히 이념과 관련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분석을 진행하였다. 국제개발학 상 각 국가의 원조 목적에 따른 이념별 원조결정규모나 원조

구성의 차이에 대해 자세한 분석을 위하여, 고정효과모형을 이용한 패널 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선진공여국의 국가특성변수인 1인당 GDP, 무역수출액, 각 산업의 부가가치액 및 공여국의 정부정책의 방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효율성지수, 공여국의 사회적 특성을 반영하는 출산율, 기대수명 등을 통제한 상황에서, 이념에 따른 총 ODA 원조규모 및 섹터별 원조규모, 섹터별 원조의 구성의 차이 및 특징에 대해 가설을 세우고 이에 대해 분석하였다.

전체 원조규모와 관련해서는 자국이익추구 이념을 표방하는 국가들이 다른 이념을 표방하는 국가들에 비하여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평균적으로 규모가 크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이는 자국이익을 추구하는 국가들인 미국, 일본 등의 원조규모가 평균적으로 타 공여국들에 비해 크고, 이들은 이러한 대규모 원조를 통해서 민간기업과의 연계 및 기업 진출의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세부적인 섹터별 규모에 관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자국이익추구 국가들이 자국이익과는 무관한 부채탕감을 제외한 사회, 경제 인프라 및 생산관련 원조 그리고 더불어 부채탕감과 같이 자국이익추구와는 무관해 보이는 인도주의적 원조 분야에까지 평균적으로 타 이념을 표방하는 국가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원조를 주고 있다는 알 수 있었다.

또한 절대적 규모 부문뿐만 아니라 전체 ODA 중 섹터별 비중에 대한 분석에 있어서도 역시 부채탕감 비중을 제외하고는 자국이익추구 국가들의 경우 전체 ODA 중 사회 인프라, 경제 인프라, 인도주의적 원조, 생산관련 원조의 비중이 타 이념을 추구하는 국가들에 비해 각각 평균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판단해보자면, 자국이익추구 국가의 측면에서 이들 국가가 추구하는 방식 즉, 자국이익을 추구하면서도 동시에 수원국의 이익에 대해 고려하는 원조방향은 원조결정요인에서 설명한 다양한 이론들이 증명한 복합요인이 반영된 결과이기도 하다. 즉, 한 국가가 중

점으로 표방하는 이념이 있다 하더라도 공적원조가 시작된 애초의 목적인 수원국의 발전과 빈곤척결과 같은 목적이 완전히 배제될 수 없으며 이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자국이익을 추구하는 국가들의 경우, 점점 부족해지는 공적원조 재원에 민간재원을 끌어들일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여 오히려 ODA의 폭을 넓히고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이러한 자국이익추구 이념의 경우 수원국과 공여국이 모두 공적원조를 통해서 이익을 창출하는 Win-win ODA에 한층 가깝게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념과 관련하여서 자국이익을 추구하는 선진공여국의 경우, ODA의 본래 목적과 가치에 어긋난다는 비난을 받고 있으나, 본 연구에 따르면 동일한 사회, 경제적 국가 특성을 지닌 국가들이라는 가정 하에 자국이익추구 이념을 표방하는 국가들이 실질적으로 수원국의 이익을 배제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자국이익추구 이념을 따르는 국가들의 경우 오히려 수원국의 수요에 부합한다면 Win-win ODA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인도주의적 원조 규모가 크고 이에 대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타 이념에 비해 높다고 하여서 반드시 수원국 수요에 부합하는 ODA를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Win-win ODA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수원국의 정책적 우선순위 같은 수요를 파악하여 원조 지원을 하여야 할 것이다.

주제어: 원조이념, 원조목적, 원조규모결정, 원조결정요인,
자국이익추구원조, 인도주의적 원조, 정치·외교적 원조

<제목 차례>

제 1 장 서론 ····· 1
제 1 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 1
제 2 절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 8
1. 연구의 대상 ····· 8
2. 연구 방법 ····· 9
제 3 절 논문의 구성 ····· 11

제 2 장 이론적 논의 ····· 12
제 1 절 원조이념과 관련한 이론 ····· 12
1. ODA의 정의 ····· 12
2. 원조결정요인과 관련한 이론 ····· 14
3. 원조이념과 관련된 선행 연구 ····· 21
4. 선행연구를 통한 국가 분류 ····· 23

제 3 장 연구가설과 연구설계 ····· 29
제 1 절 연구문제와 가설 ····· 29
1. 가설의 설정 ····· 29
제 2 절 연구의 설계 ····· 32
1. 방법론 ····· 32
(1) 패널데이터의 구조 및 장점 ····· 32
(2) 패널선형회귀모형 ····· 33
(3) 분석 방법 선정 ····· 33
2. 자료와 변수의 설명 ····· 34
(1) 분석자료 ····· 34
(2) 변수의 선정 ····· 35
(3) 변수의 설정 ····· 37

제 4 장 분석 결과 ····· 41
제 1 절 기술통계 ····· 41
제 2 절 회귀분석결과 ····· 43
1. ODA 규모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 43

2. 섹터별 규모 회귀분석결과 ····· 44
3. 섹터별 비중의 회귀분석결과 ····· 51

제 5장 결론 ····· 53
제 1 절 가설검증 ····· 54
제 2 절 연구의 요약 및 함의 ····· 56
제 3 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 60

참고문헌 ····· 62
Abstract ····· 73

<표 차례>

<표 1> DAC 규모순 상위 5개 국가와 우리나라의 최근 5년간 순 ODA규모 ····· 4
<표 2> 이념별 국가 분류 ····· 28
<표 3> 변수의 설정 ····· 39
<표 4> 2013년도 이념별 총 ODA 규모 및 섹터별 규모 ····· 42
<표 5 > 고정효과모형을 통한 총 ODA 규모 회귀결과 ····· 43
<표 6> 고정효과모형을 통한 섹터별 비중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 46
<표 7> 고정효과모형을 통한 섹터별 비중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 52
<표 8> 자국이익추구원조 (2000-2007) ····· 67
<표 9> 자국이익추구원조 (2008-2014) ····· 68
<표 10> 인도주의 원조 (2000-2007) ····· 69
<표 11> 인도주의 원조 (2008-2014) ····· 70
<표 12> 정치·외교적 원조 (2000-2007) ····· 71
<표 13> 정치·외교적 원조 (2008-2014) ····· 72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연구 배경 및 목적

본 논문의 목적은 원조 이념에 따른 공적원조규모 및 그 구성에 대한 비교 연구를 통해서 선진공여국들 사이 원조이념별 원조규모에 관한 전략과 그 구성을 통한 원조정책에 대한 분석을 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1945년 광복 이래 70여 년간 유례없는 성장을 통해 최빈국에서 중진국으로 도약하였다. 2014년 기점 대한민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은 2만 4천불로 80년대 초 1700불이었던 것에[1] 비하면 괄약할만한 발전을 이루었다. 또한 1981년도 당시 최대 3억불의 원조를 받는 등[2] 총 127억불의 원조를 받는 수원국의 입장이었으나, 현재는 15억불 규모의 ODA를 하는 공여국으로[3] 거듭났다.

한국의 원조 역사는 한국전쟁 이후 황폐한 국토를 재정비하고, 전쟁빈민들을 구휼하기 위해 많은 선진국들에게 ODA를 공여 받는 수원국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힘입어 1987년 대외경제협

---

1) The World Bank, 2014, (https://data.oecd.org/gdp/real-gdp-forecast.htm)
2) The World Bank, 2014, (http://data.worldbank.org/indicator/DT.ODA.ALLD.CD page=6)
3)OECD, 2013, (http://www.oecd-ilibrary.org/development/development-aid-net-official-development-assistance-oda_20743866-table)

력기금을 설립하였고, 이때부터 한국은 공여국으로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하였다. 대외경제협력기금은 개발도상국 정부와 경제협력 및 교류관계를 지속하고 한국의 급속한 경제 발전 경험 및 기술을 전수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1997년 당시 IMF 금융위기를 겪으며 2002년까지 기금에 대한 정부의 재정출연이 중단되어서 원조 액수가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으나, 그 후 빠르게 경제를 회복하여, 원조 기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1987년 300억 원의 정부출자금에서 시작된 원조가 2013년 말 기준으로 하여 누적 승인액 10조를 넘게 되었다. 이러한 성장에 힘입어 2010년 1월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의 24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여 명실상부 원조 공여국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한국은 2010년 당시 2015년까지 ODA규모를 국민순소득 대비 0.25%까지 예산을 확대하여 배정하고자 하였으며, 국내적으로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을 제정하여 DAC의 기준에 맞추어 원조 규모를 선진화하고자 노력하였다. 이에 따라 원조의 규모는 현재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4].

한국수출입은행[5]에 따르면, 2014년 한해 한국이 제공한 공적개발원조(ODA)는 18억5000만 달러에 이고 이 값은 전년도에 비해 5.4%(9000만 달러) 늘어난 것이다. 한국의 최근 5년간 연평균 ODA 증가율은 17.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다. OECD가 발표한 'DAC 회원국들의 2014년 ODA 잠정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원조규모는 2013년 17억6000만달러에 비해 5.4% 증가한 18억5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OECD DAC의 29개 회원국 가운데 16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지난해와 같은 순위를 유지했다[6].

경제규모 대비 원조수준을 나타내는 국민총소득(GNI) 대비 ODA 비율은 그 전년도(2013년)와 동일한 0.13%였다. DAC 회원국의 평균은

4) OECD statistics 참고
5) 한국수출입은행은 2010년 10월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ODA) 통계전담기관으로 지정됨
6) 한국수출입은행 (2015)

0.29%이며 미국 0.19%, 영국 0.71%, 일본 0.19% 등을 보인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 그에 비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공적개발원조를 늘리고 있는 추세인데, 2009년 이후 5년간 우리나라의 연평균 ODA 증가율은 17.8%로 DAC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당시 DAC 평균 증가율은 2.3%였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글로벌 경기침체 속에서 DAC 회원국 18개국 가운데 15개국이 ODA 규모를 축소한 가운데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ODA 확대 기조를 유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2014년 우리나라 ODA는 수원국에 자금과 물자를 직접 지원하는 양자원조 13억9000만달러와 국제기구를 통해 간접 지원하는 다자원조 4억6000만달러로 나뉘어 추산된다. 양자원조 중 무상원조는 전년대비 8.7% 증가한 9억달러를 기록했고, 유상원조는 2.3% 증가한 5억달러로 나타나 무상원조 대 유상원조 비중은 63대 37의 비율을 보였다(수출입은행, 2015).

지역별로 살펴보면, 기존의 아시아 중점기조는 유지하면서 아프리카, 중남미, 중동에 대한 지원이 고루 확대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시아 6억5000만달러(비중 47.0%)에 이어 아프리카 3억3000만달러(23.8%), 중남미 1억1000만달러(7.8%), 중동 7000만달러(5.4%) 순이었다. 수원국 중에서는 최빈국에 대한 원조가 양자원조의 약 40%(5억4000만달러)를 차지했고, 특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대한 지원이 전년대비 25% 증가한 3억1000만달러였다. 다자원조 4억6000만달러는 전년대비 3.0% 증가한 것으로, 세계은행, 지역개발은행 등 국제금융기구에 6.7% 증가한 3억1000만달러를, 유엔(UN)에는 1억1000만달러(23.9%)를 각각 출자·출연했다(수출입은행, 2015).

이처럼 제한된 자원으로 국가의 전략에 따라서 원조를 배분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 하에서, 우리나라가 선진공여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또는 현재 선진공여국의 표본인 DAC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공적개발원조 규모를 여전히 더 늘려야 한다는 것이 정설이다. 이에 따라 올

해 2015년 박근혜 정부는 ODA 예산으로는 사상 최대인 2조3782억원을 편성해 공여국으로서의 위상제고와 수원국과의 동반자적 협력관계 구축에 힘쓸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이는 OECD DAC의 기준 규모를 충족시켜 명실상부 공여국의 위치를 공고히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OECD 기준 규모가 우리나라에게 적정한 규모인지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즉, DAC의 ODA 기준 규모가 우리나라의 전반적 상황에 비추어보아 반드시 적절한 규모라고 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사회적인 합의나 학문적인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DAC의 기준을 만족하기 위해 ODA를 대규모 늘리고 있지만, 자원이 한정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무한정 ODA를 늘릴 수는 없으며, 우리나라 만의 원조 전략을 가지고 적정량을 책정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원조 규모와 관련하여 적절한 원조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전반적 상황을 고려해야할 뿐만 아니라, 원조를 오랫동안 진행해온 선진 공여국들의 원조 모델에 대해 충분한 연구 역시 필요할 것이다. 선진 공여국이 어떠한 기준으로 원조규모를 결정하고, 어떤 기준으로 섹터별 원조를 배분하는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나아가야할 원조 배분 방향성 및 규모결정에 대한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시사점을 도출 할 수 있을 것이다.

〈표 1〉 DAC 규모순 상위 5개 국가와 우리나라의 최근 5년간 순 ODA규모

(단위:USD million)

국가	2010	2011	2012	2013	2014
United States	32,002	31,937	31,124	31,496	32,215
United Kingdom	13,956	13,949	13,936	17,870	18,078
Germany	13,641	13,949	13,639	14,228	15,940
France	13,334	12,668	12,521	11,339	10,297
Japan	9,616	8,712	8,616	11,581	9,804
Korea	1,281	1,363	1,656	1,755	1,770
DAC Total	134,773	132,394	127,616	135,072	134,382

출처: OECD, 2015

단순하게 선진 공여국의 규모만을 고려하여 판단하면 다음과 같다. 상기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미국이 OECD DAC 국가 중 가장 원조규모가 크고, 영국과 독일이 그 뒤를 따른다. 일본 역시 상위 5개 국가에 포함되며, 일본의 원조규모는 우리나라에 비해 5배가 넘는다. 물론 이와 같은 규모에 대한 판단은 그 나라의 경제규모의 비추어 고려해야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ODA규모를 대폭 늘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DAC 전체규모의 1% 전후 밖에 미치지 못하며, 미국 등 상위 5개 국가에 비해 크게 뒤쳐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규모가 대략 16위정도 임에 비추어 보아, 절대적 규모의 증가가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 국가 예산과 자원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현재의 ODA 규모에서 지나치게 원조규모를 확대할 수는 없고, 규모를 늘린다고 하더라도 그 전에 명확한 전략과 섹터별 집중에 대한 포트폴리오 구상이 필요할 것이다. 이처럼 우리나라에 적합한 전략 및 전략 모델을 세우기 위해서는 타 공여국의 전략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환경에 맞는 적합한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타 공여국의 원조전략에 대한 분석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선진공여국의 원조결정요인이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이는 선진공여국들이 원조규모와 섹터별 규모 및 각 국의 ODA 분야별 포트폴리오를 결정할 때 기준이 되기 때문인데, 이러한 '원조의 결정요인(aid determinants)'은 국제원조와 관련하여 가장 관심이 집중되어온 연구주제로서, 이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어왔다. 원조의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들은 수원국의 필요(Recipient's Needs), 공여국의 이해(Donor's Interests) 등을 대표적 이론들로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논의에 근거하여 다양한 방식의 실증적 분석들을 진행해 왔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에서는 국제개발협력에 참여하는 공여국들이 대부분 수원국의 필요에 근거한 인도주의적 원조를 표방하고 있으나, 그러한 표면적 원조이념과 달리 실제 개발협력 원조가 이루어지는 요인은 이보다 더 다양하고 복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제 원조의 경우, 국가 자체의 정치적 요인이나 경제적 이익과 같은 실질적 요구가 개입될 여지가 매우 크고, 그에 따라서 원조규모가 달라질 여지도 크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연구에서는 공여국의 원조 규모와 관련한 원조결정요인에 보다 초점을 맞추어서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특히 원조결정 요인 중에서 공여국이 표방하는 국가 이념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이는 앞서 언급한 원조결정요인인 '수원국 필요' 나 '공여국의 이해'는 큰 틀에서 공여국이 지향하는 원조가치라고 볼 수 있으며, 이것이 결국은 공여국의 원조목적 혹은 원조국이 표방하는 이념으로 대표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특히 원조 규모 결정의 경우도 이러한 원조결정요인인 '수원국의 필요'나 '공여국 이해'와 같은 원조이념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원조규모 결정과 관련하여 원조 이념에 주목하여서 연구를 진행하고자한다. 즉, 원조이념과 관련해서는 국제개발학에서 제시되는 세 가지 목적이 존재하는데, 그러한 세 가지 이념과 관련한 원조규모결정이나 원조 구성의 차이에 대해서 자세히 연구해보고자 한다.

이때 이념이란 각 공여국들이 공식적으로 표방하는 원조 노선과 방향을 반영하는 것으로, 국가의 원조틀과 법안 등을 통해서 이를 표면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이에 더해 그 국가와 수원국과의 관계 등을 통해서 세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처럼 국가 이념을 기준으로 하여, 선진공여국들을 유형화하고, 원조 이념 유형과 관련한 원조 규모를 파악하고, 또한 원조 이념에 따른 각 국가들의 섹터별 원조비율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우리나라가 어떤 이념을 표방하느냐에 따라서 원조 규모나 원조 포트폴리오 구상과 관련된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사려된다.

국제개발학에 따른 이념은 자국이익추구, 인도주의적 목적추구 및 정치·외교적 이익추구의 세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최근 들어 자국이익을 추구하는 선진공여국의 경우, ODA의 본래 목적과 가치에 어긋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그러나 MDGs 및 올 9월에 성립된 SDGs의 이상적

인 목표 수행을 위해서는 이전보다 더 큰 규모의 원조가 필요하며(임소진, 2015) 이러한 원조를 오직 일국의 예산만으로 조달하기에는 힘들다는 것이 원조와 관련한 현재의 지배적 의견이다. 따라서 민간재원의 조달을 통해 수원국의 이익과 동시에 공여국에도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자국이익추구이념은 긍정적으로 받아 들일 부분이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념별 원조규모 및 원조 구성의 차이와 더불어 자국이익추구이념과 관련하여 보다 심도 있는 분석을 하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1. 연구의 대상

본 연구는 원조의 결정요인 중 특히 이념에 따라 공여국들을 선행연구를 통하여 3가지로 유형화하고, 이러한 원조 유형과 원조 전체 규모 및 섹터별 규모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원조 이념별 유형에 따라서 원조의 구성비율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여 국가들의 이념에 대한 선행연구 및 분석과 이러한 원조공여국들의 특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공적개발원조에 현재 참여하고 있는 공여국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이에 대한 자세한 선정 기준 및 이유는 다음과 같다.

2015년 기준 DAC 회원국은 29개국으로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ttee)를 제외하면 28개국이다. 이들 가운데 폴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체코, 아이슬란드는 DAC 가입이 2012년 이후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부족하여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사회의 개발원조 논의를 이끌고, 선진화된 공여를 주도하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연구하고자 하였다. 최근 DAC 비회원국들의 원조가 증대되면서 남남협력, 삼각협력이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의 원조 결정요인이나 행태는 자국의 이익을 보다 강조하면서 선진 공여국들과는 상이한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계우, 2011). 또한 이들은 원조 역사가 짧기 때문에 오랜 기간에 걸친 분석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선진 공여국들 만을 대상으로 유형을 분석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논문 연구의 대상은 선진 공여국인 OECD DAC 가입 29개 국가[7]이나, 이 중에서 가입하지 얼마 되지 않은 국가인 슬로베니아, 슬

7) 이에는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대한민국, 덴마크, 독일, 룩셈부르크, 미국,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아일랜드,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일본,

로바키아와 등은 제외하고 또한 규모가 ODA 규모가 3억 달러 이하인 체코, 폴란드, 그리스 및 아이슬란드 등을 제외하여,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며 규모가 3억 달러 이상인 국가로,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한국이 전략적으로 벤치마킹 할 수 있는 22개의 국가를 선정한다. 여기에 대한민국 역시 자료로 포함시켜 총 22개 국가가 분석의 대상이 된다.

분석 시기는 200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15개년 자료를 통합하여 패널데이터를 구축하여 이를 활용하였다. 이러한 패널데이터구축 자료는 OECD(2015)자료를 사용하였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원조이념이 원조규모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연구하기 위해 선진 공여국을 OECD와 the World Bank의 data를 기준으로 2005년부터 10년간의 공여국 데이터 기준 및 각 국가의 전략을 통해 국가별 원조 목적 및 형태를 분석하여 유형별로 세 그룹으로 나눈다. 이렇게 분류한 집단을 더미변수로 설정하고, 선진 공여국의 국가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이에 대한 패널회귀분석을 시행하여, 이들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국가특성이 거의 동일하도록 통제된 국가들간의 이념에 따른 원조 규모차이를 분석한다. 또한 전체 규모 뿐만 아니라 각 OECD의 분류기준에 따른 각 섹터별 규모 (사회 인프라, 경제 인프라, 인도주의적 원조, 부채 탕감 등)에 대한 분석을 한다. 또한 이러한 ODA 규모간 비교의 경우, 절대적 수치 비교에 해당하므로, 각 국가의 경제규모간 차이를 반영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따라서 ODA 규모 뿐만 아니라 전체 규모 대비 각 섹터의 비율에 대해서도 분석을 실행 하여, 이념별 원조규모 및 방향 등에 대해서 논의해보고자 한다.

캐나다,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호주, 체코,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폴란드, 아이슬란드 그리고 대한민국이 포함된다.

패널회귀분석의 방법에는 통합최소자승모형(Pooled OLS Model),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s Model), 변동효과모형(Random Effects Model) 등이 존재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 및 자료에 부합하는 타당한 분석 틀을 선정하고, 그 선정된 모형을 중심으로 하여 패널선형회귀분석을 시행하도록 한다.

제 3 절 논문의 구성

서론 이후 제 2장에서는 간단한 ODA의 정의와 이외에 원조결정요인과 관련된 이론을 통해 이념의 영향력에 대해 살펴보고, 이념과 관련된 이론연구를 해보고자 한다. 또한 각 국가별로 선행연구를 통해 이념에 따른 유형화를 진행할 것이다.

제 3장에서는 연구방법론을 살펴보고 본 연구에 적합한 모형을 선정할 것이고 그러한 연구방법을 통해서 변수를 설정할 것이다. 제 4장에서는 이러한 분석틀을 통해 이념 유형에 따라 회귀분석을 진행할 것이다. 제 5장에서는 분석의 결과 및 해석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제 2 장 이론적 논의

제 1 절 원조이념과 관련한 이론

1. ODA의 정의

원조이념에 대하여 논의하기 이전에 우선 공적개발원조(ODA)의 정의에 대해서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국제기구들과 각 국가들에서 각각 공적개발원조에 대한 정의 혹은 범주에 대한 통일된 견해를 가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구 이전에 이러한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함이다.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내 개발원조위원회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의 정의에 따르면, 개발도상국의 복지와 경제적 발전을 도모하는 공식적인 재정적 흐름이다. 또한 개발도상국의 원조 재원을 3가지로 구분하게 되는데 이는 ①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와, ② 기타 공적자금(Other Official Flow) 그리고 ③ 민간자금(Private flow)이 있다(OECD, 2009).

OECD DAC는 “국가 및 지역, 다자간 개발협력기구에 제공되는 자금 또는 기술협력 전체를 의미한다.” 라고 정의한 바 있다. 또한 개발도상국에 지원되는 재원이 명확하게 ODA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① 원조 제공 주체가 중앙 및 지방정부 혹은 그 하부 집행기관 등 공공기관이 되어야 하며, ② 그 목적이 개발도상국 경제발전 및 빈곤 감소와 복지에 기여해야 하며, ③ 증여율(Grant Element)이 전체의 25%이상인 양허성 자금으

로 이루어 져야하며, ④ 주요 수원 대상으로는 OECD DAC 수원국 리스트에 포함된 국가 혹은 동 국가를 주요 수원대상으로 하고 있는 국제기구를 그 대상으로 선정한다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OECD; Paris, 2005). 그러므로 국가와 관계없는 NGO 자금과 경제개발 및 국가 복지증진에 목적이 없는 군사장비 구입 지원, 혹은 종교, 예술 및 문화 활동 지원과 같은 자금은 ODA에 포함되지 않는다(EDCF,2014).

또한 단순히 ODA의 범주를 벗어나서, ODA의 성격, 대상 등을 중심으로 한 정의에 대해서도 알아볼 수 있는데, 정창호(2010)는 "OECD가 수원국 명단 제 1부 국가로 분류한 개도국의 개발 프로젝트 등에 대해 OECD 국가들의 정부 또는 공적기관이 통상의 상업금융조건보다 유리한 장기저리의 조건으로 제공하는 개발원조 차관이나 무상원조 등을 ODA라고 하며, ODA에 자국 수출자의 수출을 촉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용되는 수출 금융이나 군사원조 등은 개발원조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ODA의 경우는 상업적 목적 혹은 국가의 경제적 이익 관련 공적목적으로 이용되지 않고, 수원국의 발전에 이용되는 차관 및 무상원조 등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외교부는 "ODA는 선진국의 정부기관이 개도국의 경제개발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개도국에 지원하는 증여 및 유·무상 차관"으로 정의하고 있다[8].

현재 ODA에 관해서는 the World Bank 등 주요 다자기구 및 공여국 기구에서 OECD의 정의를 따르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OECD DAC의 정의에는 수원국의 입장 뿐만 아니라 공여국의 입장까지 두루 반영 되어 있다는 점에서 보다 포괄적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OECD DAC의 기준을 따라서 ODA를 정의한다.

8) 외교부, ODA KOREA, 개념규정 참고

2. 원조결정요인과 관련한 이론

원조가 시작된 이래로 전세계 원조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며, 이와 동시에 원조결정요인은 주제는 공적원조와 관련된 연구분야에서 가장 오랜기간 중심이 되었던 주제로 떠올랐다. 이 중에서 선진국의 원조결정요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론과 실증적 논의가 지속되어 왔는데, 이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논의들이 진행중이다. 원조의 큰 틀에서는 원조자체가 국제사회라는 공동체를 대변하는 UN이 낙후 국가들이 겪고 있는 수많은 문제와 그에 따른 참상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이것이 개개 국가 차원의 국제원조 차원으로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인도주의적 본질'을 가지고 있음은 틀림없다. 즉 원래 국제원조는 세계2차 대전 이후 선진국을 중심으로 전쟁의 폐허가된 국가들을 복구하고자 하는 노력에서 시행되었으나 현재는 국제사회의 빈곤문제 해결과 경제개발에 특히 주안점을 두고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국제사회 전체의 안녕과 행복을 지키고자하는 인도주의적 목표에 따라 지난 60년 동안 수많은 국제원조정책들이 진행되어 왔으며, 약2조 3000억 달러의 돈이 국제원조에 사용되어온 것으로 평가된다(Easterly, 2007).

이처럼 원조의 큰 틀에서는 국제원조가 인도주의적 목적이 그 시발점이었으나, 원조역사가 오래도록 지속되며, 단지 그러한 목적만을 추구하기에 여러가지 어려움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2000년 들어 UN의 MDGs(Millennium Development Goals)하에, 국제개발원조 필요액은 점점 늘어남과 동시에 국제사회는 미국발 경제위기 등 외생적 악재 속에서 불어나는 원조규모를 개개의 국가들이 단순히 '인도주의적 목표'하에서 담보하기는 어려워졌다. 따라서 공적개발원조를 통해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챙기고자 민간과 협력을 진행하는 등 원조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원조의 목적 또한 인도주의적 틀을 벗어나 자국의 이익과 동시에 인도주의적인 목적을 기치로 삼는 등의 행보를 보였다.

이처럼 원조결정요인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논의하기 위해서 OECD DAC 회원국들의 원조 배분형태를 바탕으로 공여주체들의 원조 결정요인을 분석해보아야 할 것이다. 공여국들이 어떤 국가에 원조를 부여하는지를 파악함으로써 원조 결정 시 고려하는 요인들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구를 위해 그동안 진행되어온 원조결정요인과 관련된 이론과 실증연구들을 자세히 논의해보고자 한다. 원조 결정요인과 관련한 이론으로는 공여국이 자국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원조한다는 이론과 개발도상국의 필요에 의해 원조한다는 두 이론이 전통적으로 지배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Mckinlay& Little, 1979). 이후 대부분의 연구들이 이러한 '공여국 이익' 및 '수원국 필요'라는 관점에서 연구를 진행해 왔다.

기존 연구들은 이러한 양대 관점에 따라, 오랜 시간에 걸쳐 공여국들이 어떠한 결정요인에 의해 원조하고 있는지를 분석해왔으나, 여러 차례 상반되는 결과가 제시되면서 논쟁이 계속되었다. 기존 연구의 대상은 선진국가들로 국한되었으나, 원조 역사 60년 사이 공여주체는 다양하게 늘어났고 많은 공여국들이 원조에 참여하게 되면서 이들 주체들이 원조를 제공하는 목적에 따라 원조결정요인이 달라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원조배분의 형태가 다양화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실제 대부분의 공여국들이 대외적으로는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를 목표로 함을 주장하고 있지만(이계우, 2011), 실제로는 과거 식민지 관리, 체제 간 경쟁, 경제적 유대관계 형성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한 원조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기존 연구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Alesina & Dollar, 2000; Berthelemy, 2006; Berthelemy & Tichit, 2004; Schraeder, Hook, & Taylor, 1998). 이는 국제사회가 최빈개도국 및 개도국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인도주의적 원조'를 지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그 이면에는 자국과의 관계 및 자국의 이익 등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도 한다.

Lancaster (2008)는 덴마크와 미국의 원조정책에 대해 양자를 비교하

면서, 두 국가의 원조 결정요인과 이에 따른 원조정책 분석을 진행하였다. 동 연구에 따르면, 덴마크와 미국 양자 모두 개발도상국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공여국의 경제 및 외교적 이해관계를 포함한 복합적 목적 역시 빼놓을 수 없었다. 덴마크는 자국 수출증진을 위한 수원국의 내수증진과 관련된 지원을 하는 경향이 있으며, 미국은 그러한 간접적인 방식 보다는, 조건부적 원조관계를 통해 경제적 이해관계를 충족시키고자 하였다. 양국의 원조이념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정책담당자의 인식이였다. 미국의 경우, 정책담당자는 미국의 이익을 원조의 목적 그 자체로 여기는 반면에, 덴마크의 경우 직접적으로 자국이익을 원조의 목적으로 인식하기보다는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을 1차적 목적으로 인식하고 이에 따른 파생적 효과를 국익과 연관시키고자 하는 경향이 크다는 점이다. 양 국가간의 이러한 정책담당자의 인식차이가 실제로 원조정책 자체의 성격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선진 공여국들 사이에서도 수원국 이익과 수원국의 경제 발전이라는 이상적인 원조 목적 외에도 원조와 관련하여 다양한 결정요인을 가지며 이러한 결정 요인에 대한 분석을 통해 공여국의 원조 규모나 원조 포트폴리오와 관련한 영향요인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원조 결정요인에 관한 이론은 앞서 언급했듯이, 고전적인 이론으로 자리잡아온 공여국의 자국의 이해를 반영한다는 이론(Donor's Interest)과 원조 대상국의 경제적인 수준과 국민들의 삶의 수준 등 수원국의 필요를 반영한다는 이론(Recipient's Needs)을 큰 축으로 하고 있다(Mckinlay, 1978; Mckinlay & Little, 1977, 1978a, 1978b, 1979). 2000년 새천년개발목표(MDGs) 합의 이후로 공여국의 원조 배분에 관한 논의가 여러 국제회의에서 등장하며, 민주주의의 발전 및 다양한 국가 정책 주체들이 등장하게 됨에 따라서 최근에 들어서는 개발도상국의 국가 거버넌스 혹은 국제사회의 관계 등을 주요 결정요인으로 삼은 새로운 이론들도 등장하였다(구정우·김대욱, 2011; Berthelemy, 2006; Berthelemy & Tichit,

2004)

우선 원조결정이론과 관련한 가장 큰 틀인 수원국 필요-공여국 이해 이론(RN-DI, Recipient's Needs - Donor's Interests)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논의해보고자 한다.

원조 결정요인 연구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적 연구이며, 깊은 논의와 다양한 연구를 거쳐 정립된 이론이 바로 '수원국의 필요 및 공여국의 이해(RN-DI, Recipient's Needs - Donor's Interests)'모형이다. 이 모형은 Mckinlay (1978)와 Mckinlay and Little (1977, 1978a, 1978b,1979)의 연구에서 제시된 접근방법으로 이는 전통적 공여국들인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의 국제 원조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사례분석(case study) 방법을 통해 이론화를 시도한 귀납적 연구방법이다. 동 분석에 따라, 공여국은 자국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원조인지를 고려하고 혹은 국제 원조가 가장 시급한 수원국인지 여부에 따라 원조를 결정한다는 이론이 제시되었다. 즉, '공여국의 이해' 모형에 따르면, 공여국들이 원조 대상을 결정하고 공여액 규모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시 여기는 부분이 자국의 경제적·정치적 혹은 외교 전략적 이해라는 것이다. 따라서 자국에게 이익이 되는 국가들로 선정하게 되며, 그 국익에는 경제, 정치, 외교 등의 국정과정에서 주요 분야들이 포함된다. 이와는 정반대의 입장인 '수원국의 필요' 모형은 공여국들이 원조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원조의 대상인 수원국의 사정이라는 것이다. 즉, 수원국의 경제적 및 사회적 상황 및 필요가 원조대상을 결정하고 원조규모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더 중시되는 사항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국가에 우선적으로 원조를 그 규모도 수원국의 필요 정도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는 의견이다.

이들의 연구는 원조결정요인과 관련한 큰 통찰력(insight)을 제시하여, 후속세대의 연구의 큰 틀을 하였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당시의 연구는 이론 제시에 불과하여 이론의 실질적 타당성에 대한 실증적 검증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이 한계로 남아 있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선진 공여국들을 대상으로 양적 연구를 시도함으로써, 이론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검증하려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Mckinlay and Little (1977, 1978a, 1978b, 1979)이 제시한 RN-DI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원조 결정요인을 연구한 논문들에 따르면, 최빈개도국의 경제적 빈곤의 정도 및 사회적 원조필요 정도를 반영하여 가장 시급한 국가에 우선적으로 원조를 배분하며 규모를 조정하는 것이 바로 수원국의 필요에 의한 원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수원국의 필요' 모형은 애초에 국제사회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원조정책을 가정하고 있는 것이다(Alesina &Dollar, 2000; Trumbull & Wall, 1994).

Trumbull and Wall (1994)은 1984년부터 1989년까지 원조 배분 모형을 추정하기 위해 대략 86개국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패널 데이터를 수집하여 원조배분현황에 대해 체계적인 분석을 진행하였는데, 수원국의 행복수준에 대한 3가지 차원의 변수를 도입하였으며, 일인당 소득으로 보이는 물질적인 행복수준, 영아사망률 수준으로 나타나는 신체적 행복수준, 정치적/시민권리 각각에 대한 변수들을 투입하여 수원국의 필요를 나타내는 변수들과 일인당 ODA 공여액과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즉, 경제적 측면, 사회적 측면 등을 나누어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동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개발도상국에 대한 사회적 필요의 경우 원조배분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고 나왔으나, 경제적 수요에 대해서는 크게 고려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수원국의 필요와 관련된 변수만을 분석대상으로 설정하였으므로 허위변수 등의 문제가 있으며, 제한된 조건으로 인해 매개 변수 및 기타 주요 요인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편향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만한 가능성이 존재한다(이계우, 2011). 또한 결론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수원국 필요와 관련된 변수만을 고려할 뿐, 이에 더 나아가 공여국의 이익이나 공여국과 수원국간의 상호 이익관계 여부 등에 대해서 연계시키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한계점이 존재한다.

이후 많은 연구들이 수원국의 필요와 공여국의 이해를 동시에 고려하

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수원국의 필요와 공여국의 이해를 동시에 분석한 많은 연구들은 상대적으로 공여국의 이해가 원조 결정에 있어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주를 이루었다(구정우, 2011; 구정우·김대욱, 2011; 이계우, 2011).

공여국의 이해 모델은 국가의 경제적, 정치적, 전략적 이해에 따른 원조를 시도하는 것이다. 이익은 크게 경제적 이해와 정치적 또는 전략적 이익으로 구분되어 논의되어왔다. 경제적 이해는 무역거래나 경제적 개방성, 자원의 보유정도 등의 변수를 통해 분석되었으며, 정치적 또는 전략적 이해에 대해서는 군사 규모, 정치적 이념 유사성, 지역의 근접성, 식민지 관계의 유무 등의 다양한 변수로 반영되어 분석되었다(구정우, 2011; 이계우, 2011; Alesina & Dollar 2000).

RN-DI 모형을 적용한 대표적인 사례로 Alesina and Dollar (2000)의 연구는 공여국의 이해를 반영하기 위한 변수로 경제적 개방성, 정치적 개방성, 식민지 관계 등 다양하게 적용하였다. 이들은 공여국 간의 차이와 원조배분의 동기를 파악하고자 했으며, 실제로 원조배분에는 정치적이고 전략적인 측면이 고려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대체로 냉전 시기를 분석한 연구들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파악되었다. 냉전시기의 원조 정책은 전략적이고, 정치적인 이해에 목적을 띄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민주주의 국가, 구식민지 국가에 선택적으로 원조를 배분하는 양상이 돋보였다. 그러나 냉전이 종결된 1990년대 이후에는 체제경쟁을 위한 목적 보다는 무역관계나 경제적인 연계가 원조 결정에 중요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원조 정책이 변화되었다(Alesina & Dollar, 2000; Berthelemy & Tichit, 2004; Dollar & Levin, 2004, 2006).

Berthelemy and Tichit (2004)는 냉전시대 전후인 1980년대와 1990년대를 연구시기로 설정하여 변화되는 결정요인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1980년대는 구식민지 국가에 대한 전략적인 원조가 주를 이루는 반면, 1990년대에는 무역관계가 원조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나

공여국의 이해 추구가 전략적 이해에서 경제적 이해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Berthelemy and Tichit(2004)는 공역국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무역거래량을 변수로 활용하였다.

Bandyopadhyay and Wall (2007)의 연구가 공여국의 이익에 대한 변수를 포함하지 못한 것과 DAC 회원국을 종합하여 본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수원국의 필요뿐만 아니라 공여국의 이해까지도 포괄하는 형태로 분석모형을 다양화하였고, 공여국별 결정요인을 분석할 수 있는 모형을 제시하였다. 또한, 보다 정교한 통계적 방법의 활용을 위해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s model)을 도입하여 수원국 개별의 고유한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의 연구들보다 신빙성 높은 결과를 도출하였음을 주장하였다. 이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기존 연구들에서 주장한 수원국의 필요를 고려한 이상적인 원조 배분(Berthelemy & Tichit, 2004; Dollar & Levin, 2004)이 아닌 공여국의 이해에 의한 원조를 수행한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OECD DAC 또는 전체 공여국들을 분석단위로 설정하여 공여국들이 수원국의 필요보다는 공여국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공여국들의 원조 정책은 공여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사례간 비교 연구에서는 공여국들 사이의 원조 결정요인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이 분석되었고(Hook, & Taylor, 1998), 국가비교 연구를 시도한 실증 연구들에서도 이러한 결론이 지지되었다(Alesina & Dollar, 2000; Berthelemy & Tichit,2005; Dollar & Levin, 2006).

이처럼 원조결정요인과 관련하여 '수원국의 필요'와 '공여국의 이해' 양자가 복합된 형식으로 발전해왔고, 각 국가들의 정책은 두 가지 요인 중 자국의 원조 목적이나 국가 이념에 따라 어떤 요인을 좀더 중시할 것인지에 대해 방향성을 결정해왔다(Hook, & Taylor, 1998). 따라서 원조결정 및 원조 규모결정과 관련해서는 '이념'이 주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즉, 이러한 복합적인 원조결정요인들을 유형화 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가 바로 이념에 따른 분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생각하에 원조이념과 원조규모간 관계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였고, 특히 이러한 원조 이념과 관련해서 이론 및 선행연구를 우선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원조이념과 관련된 선행 연구

공여국의 원조동기는 그 자체만으로도 한 국가의 원조정책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이며, 동기가 곧 동 국가의 원조 이념을 뜻하게 된다. 따라서 공여국의 원조정책 분석과 관련하여 원조지원 동기 및 목적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국제개발학의 기존 연구에 따르면 공여국의 원조지원 동기를 국제개발학 상의 전통적 접근에 따라 세 분류로 나누는데, 이는 인도주의적, 정치·외교적 그리고 상업적 동기[9]이다(Lancaster, 2007).

Browne(1990)은 OECD DAC 회원국인 18개국(1990년대 당시)[10]과 그 외 DAC 비회원국 공여국인 소비에트 연방 및 석유수출국기구(Organization of the Petroleum Exporting Countries, OPEC)를 포함한 아랍 공여국 등 다양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이들 공여국이 원조를 제공하는 동기를 개발의 이유, 정치·전략적 이유, 상업적 이유를 기준으로 제시한 바 있다.

Riddell(2007)에 따르면 공적개발원조의 경우, 공여국의 국민 세금이 그 재원이기 때문에 ODA원조의 목적은 언제나 정치적 영향이 개입될 수 밖에 없다고 한다. 다시 말해 국가의 정치,외교적 동기 혹은 상업적

9) 혹은 자국이익추구 목적이라고도 한다.
10)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이태리, 일본,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 EU

동기의 경우 앞서 언급한 이론들 중 국익을 우선시 하는 현실주의의 입장에서 모두 '국익' 추구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순수 인도주의적 동기는 정치·외교적 혹은 상업적 동기와는 반대되는 의미에서 국익추구와는 달리 수원국의 입장에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UN의 원조 입장과도 일맥상통한다.

Lancaster(2007)는 원조 동기의 전통적 3대 분류를 재정의한 바 있는데, 이를 각각 개발의 목적, 인도적 구호의 목적, 외교적 목적, 상업적 목적, 문화적 목적으로 구분하였다. 개발 및 인도적 구호 목적은 기존 분류의 인도주의적 동기와 동일한 것이며, 외교적 목적 및 상업적 목적은 각각 기존의 정치·외교적 이유와 상업적 이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그 외 문화적 목적을 새롭게 추가하였다고 볼 수 있다.

Riddell(2007)의 경우를 살펴보면, 앞의 3대 분류 중 인도주의적 지원 동기를 긴급구호, 개도국 개발, 연대(solidarity)의 이유로, 정치·외교적 이유는 정치·전략적 이유로 재구분하고 있으며, 상업적 동기 이외에도 역사적 이유와 개도국의 인권증진 등이 공여국의 원조동기의 이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공여국들이 전통적인 3가지 원조 동기 중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분류할 수 있을까. Riddell에 따르면 일국이 어떤 한 유형만 포함된다고 분류하기는 어려우며, 공여국의 원조동기가 일반적으로는 복합적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그렇다면 3대 원조동기 중 소위 말하는 이타적 이유의 인도적 동기와 국익을 추구하는 정치·외교 및 상업적 동기 중 어느 것이 공여국 원조정책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일까?

Browne(1990)l은 대부분 국가가 원조시 인도주의적 동기가 존재하긴 하지만, 정치·외교적 이유와 상업적 이유 또는 그 외 국익과 관련된 이유를 배제하고 순수한 이타적 이유만으로 원조를 제공하기는 어렵다고 인정하고 있다. Sogge(2002)는 실제 국가의 정치적 이념과 상업적 이익 추구가 원조를 결정짓는 실제적 요인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실제로 원조지원 동기에 대한 선행연구 중 10개 이상의 공여국 정책을 비교분석하

고 있는 연구결과를 조사해본 결과, 한 가지 동기만으로 원조를 제공하는 국가는 없었으며, 원조정책에 인도주의적 동기가 전혀 없는 국가도 찾아볼 수 있었다(임소진, 2013).

동 연구들에 따르면 원조의 기본적인 동기는 '인도주의적 목적'이 될 것이다. 그러나 표면상의 이유가 아닌 실질적으로 그 국가의 목적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각 국의 원조정책이나 이를 규정한 법률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각 국가들의 원조 이념을 살펴보고 이들을 앞서 언급한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해보고자 한다.

4. 선행연구를 통한 국가 분류

앞선 연구들 중, Lancaster(2007)에 따르면, 각 국가들의 원조 이념 혹은 원조의 목적을 3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이는 각각 자국경제이익목적 추구, 인도주의적 목적, 마지막으로 정치·외교적 목적이다. 각 이념에 대해 보다 자세히 설명해보자면 다음과 같다.

자국이익 추구형이란, ODA를 특히 자국의 경제이익의 도구로 이용하고자 하는 국가를 의미하며, 무역 및 FDI 등 경제실익적으로 ODA를 맺는 것이 특징이다. Hook(1995)의 미국, 일본, 프랑스, 스웨덴을 비교분석한 이 논문에서는 문헌검토를 통해 미국의 원조는 동맹관계를 염두에 두고 경제적 실익을 추구하며, 또한 이념적 배경을 고려하며, 국가의 전략적 안보를 중요시 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일본의 경우 경제적 국익을 추구한다고 분석하였는데, 일본의 원조헌장[11]에 따르면 우선 지역적으로 일본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 필요한 아시아 지역에 집중적으로 원조를 제공하고 있다. 실제로 일본의 여러 정책자료에 따르면 일본은 대외무역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원조를 통해서 상업

11) 일본의 원조는 대부분 원조헌장에 따라 이루어진다.

적 이익을 지속적으로 추구해야함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 역시 자국이익 추구형에 해당한다. 이 외에 각 국가의 원조 헌장 등을 통하여 살펴본 결과 이러한 유형에는 미국[12], 일본, 호주[13], 이탈리아, 스위스[14], 캐나다[15] 등이 포함된다.

호주의 경우 공적원조가 1950년 콜롬보의 영연방 외무장관회의에서 제창된 남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공동개발을 위한 계획(이른바 콜롬보계획)에 의해서 본격 개시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동남아시아의 공산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인구가 적은 호주에서 국가안전보장의 확보를 가장 최우선점으로 두었고, 개발원조가 군사정책과 함께 자국의 안전보장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개발 정책 수단이었다. 결국 호주의 원조 이념의 변화는 순수 인도주의적 목적에 기반을 두었다기 보다는 자국의 정치적 이익 추구와 함께 안전보장을 실현하기 위한 간접적인 방편으로 등장하였고, 이후 주변 개도국의 정치사회적 급변이 자국에 대한 위협(테러발발, 난민의 대거 유입)으로 작용하지 않도록하기 위해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호주의 원조동향을 살펴볼 때, 양자간 원조의 집행이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지원을 우선적으로 필요로 하는 최빈개도국보다는 몇몇의 솔로몬 제도 등 인근국가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호주가 대외원조를 자국의 외교전략의 일환으로써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이희진·문경희 외, 2011).

인도주의적 목적추구란 자국이익추구보다는 상대적으로 수원국의 필요를 상대적으로 중시하며, 경제규모 대비 원조규모가 크고, 다자간 ·무상비구속성 원조 비중이 높다. 또한 원조에 있어서 최빈개도국 점유율이 높고, GNI 대비 ODA 0.7%를 달성한 북유럽 국가들 위주이다. 이에는

---

12) 미국의 원조헌장의 이념은 “미국시민과 국제사회를 위한 안전하고 민주적이며 번영하는 세계를 조성”이다.
13) 호주의 원조 헌장에 나온 이념은 "개도국의 빈곤감소와 지속가능한 개발을 통하여 자국의 국익 신장“이다.
14) 스위스의 이념은“자국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개도국의 노력을 지원”이다.
15) 캐나다의 이념은 “번영과 고용 촉진, 국가안보와 세계 평화, 캐나다의 가치와 문화 전달”이다.

스웨덴[16], 노르웨이[17], 덴마크, 핀란드[18],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그리고 뉴질랜드[19]가 포함된다. 특히 Hook(1995)의 연구에 따르면 스웨덴은 인도주의적 목표에 의한 원조결정이 이루어짐을 확인하였다고 언급하고 있으며, 이외에 타 국가들의 공적원조 관련 법률이나 헌장을 살펴보면 이러한 특징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룩셈부르크 의회는 1996년에 1985년에 제정되었던 <개발협력법률>을 개정하였는데, 동 법률은 룩셈부르크의 원조 목적을 포함하여 5개의 주요 사항을 정하고 있다. 개발협력의 목적은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경제 및 사회개발, 개발도상국의 점진적이고 조화로운 세계경제 참여,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축"을 위한 것이라고 정하고 있다(KOICA 2008). 이외에 네덜란드는 네덜란드 법률상 "지속가능한 발전과 빈곤감소(sustainable poverty reduction)"를 기치로 내걸고 있으며, 핀란드 역시 "전세계의 빈곤을 근절하는데 공헌하기 위하여(to contribute to the eradication of extreme poverty from the world)" 라고 법률상 명시하고 있다.

정치・외교적 실익추구형 국가들은 대표적으로 영국[20], 프랑스, 포르투갈, 스페인[21] 등 식민지를 많이 두었던 서방국가들이며, 이들은 구 식민지와의 양자원조 비중이 50% 이상으로, 이들과의 관계유지를 위해 ODA에 투자를 하는 경향이 높은 나라들이다. 특히 예를들어 Hook(1995)에 따르면, 프랑스는 경제적 이해관계와 문화적 유사성을 강조하는 식민지 관리 차원의 원조가 주를 이루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개발원조의 목적에 있어서 이와 같은 차이는 각 국가가 가진 개발원조에 대한 이념적 기초, 국제사회의 빈곤 및 개발에 대한 책무에 있어서의 인식, 자국을 둘러싼 국제적 여건 및 입장 등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

16) 스웨덴의 원조이념은 "인권보호, 민주주의와 굿거버넌스, 남녀평등" 이다.
17) 노르웨이의 원조이념은 "국제사회의 목표인 MDGs 달성에 기여" 이다.
18) 핀란드의 원조이념은 "빈곤감소를 위한 국제사회의 결의에 동참" 이다.
19) 뉴질랜드의 이념은 "파트너쉽 강화를 통한 빈곤감소" 이다.
20) 영국의 원조이념은 "빈곤감소와 국제개발목표 달성" 이다.
21) 스페인의 원조이념은 "빈곤타파, 인권보호, 남녀평등, 지속가능한 환경, 문화적 다양성의 존중" 이다.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분류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 지 역시 중요한 사안일 것이다. 분석을 위해서 우선 대한민국 정부의 ODA사업의 이념과 정책 방향을 이해 해야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은 국가정책전망과 재원배분계획을 제시하는 5년 단위 계획으로 중장기 국가비전과 정책 우선순위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22].

노무현정부 마지막 해인 200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ODA 확대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한다. 2000년 유엔 '새천년개발목표(Millenium Development Goals, 이하 MDGs)' 수립 이후, 우리나라의 개도국 원조는 2000년 2억불 수준에서 2006년 5억불 수준으로 2.5배 증가시켜 우리나라의 국제사회 기여도를 제고하였다. 국제사회에서의 기여도 및 외교역량 강화를 위해 GNI 대비 ODA 규모를 2011년까지 0.12%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국국제협력단(KOICA) 출연금 및 대외협력기금(EDCF) 차관 공여액 등을 매년 확대하는 한편, 경제발전경험에 기초한 한국형 원조모델수립, 사업평가 강화 등 사업추진의 질적 수준도 높여나갈 계획이다." 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우리나라의 국격에 맞는 수준과 국제사회의 요청에 맞추어, 개도국 원조 규모를 늘리며 늘리는 원조규모가 특히 개도국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동시에 '우리나라 국익'에도 도움이 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명박정부 첫해인 200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우리의 경제력에 걸맞는 국제적 책임과 역할 수행을 위해 ODA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개도국에 대한 우리의 개발경험 전수, 해외봉사단 파견, 국내 초청연수 사업 등을 통해 개도국과의 우호협력 및 상호교류를 증진해 내갈 것이다." 라고 언급하였는데, 이를 통해서는 자국이익과 관련된 부분은 찾아볼 수 없어 인도주의적 목적에 보다 가까운 것으로 보여진다.

---

22) 국가재정운영계획은 노무현정부 때인 2004년부터 작성되어왔다.

그러나 이명박정부 마지막해인 2012년 국가재정운영계획에 따르면, “파급효과가 큰 브랜드 ODA 확대로 외교역량 강화 등 국가위상 제고 노력 강화하겠다. 지속가능한 녹색성장 지원을 위해 폐기물 처리, 신재생 에너지 분야(예, 태양력, 풍력) 등 녹색 ODA를 중점 발굴·지원하겠다. 효율적인 ODA 지원을 위해 개발 컨설팅을 확대하고 인력 파견을 통해 해외 일자리 창출도 병행하겠다.”라고 언급하여 해외 일자리 및 외교 역량강화 등 ODA를 통한 국익의 목적을 함축하고 있다. ODA 예산의 성과평가 지표로 해외일자리 지표가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등장한 것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박근혜정부 첫해인 2013년 국가재정운영계획은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 확대를 통해 국가위상 및 신뢰 제고하기 위해 ODA 지원을 지속 확대하고 효율적·통합적 개발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수원국의 자립역량 배양 및 지속가능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별 협력전략(CPS)에 부합하는 사업을 중점 지원하고 우리의 개발경험 활용 및 인력 해외진출 사업을 적극 발굴한다.”고 언급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우리 기업 진출과 연계한 대개도국 차관 사업을 확대하여 개도국 인프라 확충 및 신흥시장 개척을 동시에 추진하고, 해외봉사단과 청년인턴(KOICA)을 통해 해외 청년일자리 파견 확대 등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 확대, 베트남 새마을운동(신규, 49억원) 등 새마을운동 확산을 통해 개도국 자립역량 강화 지원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는 이명박 정부와 마찬가지로 해외 일자리 창출의 목적을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기업 연계의 목표까지 드러내어 명백히 자국이익추구의 이념을 기치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적원조를 본격화 시킨 상기 3대 대통령의 정책과 방침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자국이익추구이념의 국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상기 나라별 국가공적개발원조 이념 등을 문헌연구를 통해 살펴본 결과, 이하에서는 OECD DAC의 선진공여국에 대하여 이념별로 국가 분류를 진행하였다.

<표 2> 이념별 국가 분류

유형	국가
자국이익추구형	미국, 일본, 호주, 이탈리아, 스위스,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대한민국
인도주의적 목적추구형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정치·외교적 이익추구형	독일, 프랑스, 포르투갈, 스페인, 영국, 벨기에

이러한 분류는 동 국가가 인도주의적 원조비율이 높은지 등과는 관계없이 오로지 국가가 외부적으로 드러낸 '국가이념' 혹은 '원조목적' 등으로 분류한 것이다. 따라서 각 국가들이 이념에 따라 실질적으로 원조 규모나 원조 포트폴리오에서 어떠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지 등은 이하에서 보다 자세히 분석해보고자 한다.

제 3 장 연구가설과 연구설계

제 1 절 연구문제와 가설

1. 가설의 설정

본 연구는 ‘선진공여국의 원조이념별로 원조규모가 어떻게 달라지며, 또한 원조섹터별 포트폴리오는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라는 연구질문을 가지고 그 답을 찾기 위해 패널분석을 실시하였다. 원조분배나 원조결정요인과 관련하여서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많은 선행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으나, 원조목적에 따른 원조규모 분석이나 원조 섹터별 배분에 대한 분석은 많이 진행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이념별로 국가간 원조규모와 원조배분상태 및 원조포트폴리오 구성에서의 유의미한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패널회귀분석을 진행한다.

1. 이념별 국가들의 원조규모의 차이가 존재한다.
2. 이념별로 각 섹터간 원조규모(원조배분)의 차이가 존재한다.
2-1. 이념별로 사회인프라 원조규모의 차이가 존재한다.
2-2. 이념별로 경제인프라 원조규모의 차이가 존재한다.
2-3. 이념별로 인도주의적 원조규모의 차이가 존재한다.

2-4. 이념별로 생산분야 원조규모의 차이가 존재한다.
2-5. 이념별로 부채탕감분야 원조규모의 차이가 존재한다.
3. 국가 이념별로 국가원조배분 비율의 차이가 존재한다.
3-1. 이념별로 사회인프라 원조비율의 차이가 존재한다.
3-2. 이념별로 경제인프라 원조비율의 차이가 존재한다.
3-3. 이념별로 인도주의적 원조비율의 차이가 존재한다.
3-4. 이념별로 생산분야 원조비율의 차이가 존재한다.
3-5. 이념별로 부채탕감분야 원조비율의 차이가 존재한다.

연구가설 1: 이념별 국가들의 원조규모의 차이가 존재한다.

원조이념별로 각기 원조규모의 차이가 존재할 것이다. 이는 원조결정 이론에서 언급되었듯이, 공여국의 이익과 수원국의 요구와 같은 전통적 원조결정요인들은 각 국가들이 양자 중 어디에 더 큰 비중을 두는지에 대한 결정이며, 이러한 것은 결국 동 국가들의 원조이념으로 해석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원조결정요인에 따라서 원조규모가 결정되고, 원조배분이 결정되는 것은 전통적인 이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실증연구에서 연구되어지고 있는 부분이다. 따라서 국가들 역시 자국이 기치로 삼고있는 이념별로 원조규모가 차이가 날 것이라는 가설에 일면 타당성이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연구가설 2: 이념별로 섹터간 원조규모의 차이(원조배분의 차이)가 존재한다.

이념별 원조규모 차이의 경우 단순히 전체 원조규모에서만 생기는 것으

로 생각할 수도 있으나, 원조결정요인이론에 따르면 그러한 요인들이 원조배분에도 실질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러한 원조배분 현황을 살펴보고 분석하여, 이념별로 그러한 차이가 실질적으로 존재하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 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따라서 원조배분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서 OECD DAC의 원조 섹터별 분류에 따라 원조섹터를 일곱 가지로 나누었고, 그 7가지 섹터 중 원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원조이념과도 관계가 있는 5가지 섹터(사회인프라, 경제인프라, 인도주의적 원조, 생산분야 원조, 부채탕감)를 선정하였다. 동 다섯 가지 분야 각각 이념별 원조규모를 비교하여 그 차이를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연구가설 3: 국가 이념별로 원조배분비율의 차이가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그러한 규모별 비교의 경우 절대적인 규모만을 비교하게 될 시, 실제 국가 경제규모가 큰 미국이나 일본이 포함된 자국이익국가들의 원조규모가 커지는 편향된(biased) 분석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동 국가의 절대적 규모 비교 뿐만 아니라 전체 원조규모 대비 각 섹터의 비율을 비교하고자 한다. 이는 앞서 언급했듯이, 국가 경제규모 등을 1인당 GDP 및 무역수출액 변수들을 통해 통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편향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섹터별 비율을 산정하고 이를 이념별로 비교하는 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때 앞서 언급한 OECD 7가지 분류 중 주요한 5가지 섹터만을 선정하여 분석한다.

제 2 절 연구의 설계

1. 방법론

이 절에서는 본 논문의 목적에 부합하는 타당한 방법론을 선택하기 위해 먼저 패널데이터의 구조 및 특징을 살펴본다. 이는 횡단면 분석과 패널분석 중 어떤 방법이 적합할 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함이다. 다음으로 통합OLS 모형(Pooled OLS Model),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s Model), 변동효과 모형(Random Effects Model) 등의 패널회귀분석을 살펴본 후, 결론적으로 이를 토대로 타당한 분석 방법을 선정한다.

(1) 패널데이터의 구조 및 장점

패널데이터(panel data)란 시계열 데이터와 횡단면 데이터를 한데 합쳐 놓은 데이터로서, 시계열 분석 내지 횡단면 분석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보다 많은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패널데이터 분석은 횡단면 자료를 이용한 단순한 분석과 달리 변수들 간의 동태적(dynamic) 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 횡단면 자료를 이용한 회귀분석의 경우 특정 시점에서의 여러 개체에 대한 자료를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정적(static) 관계만을 추정할 수 있다. 즉, 시점이 고정되어 있어서 분석하고자 하는 대상의 변화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어렵고, 특정 시점에서 다른 대상과의 비교를 통해 분석결과를 이끌어 내는 것이다.

또한 패널데이터를 이용하게 될 시, 횡단면 또는 시계열데이터에 비해 연구자에게 보다 많은 자유도(degrees of freedom)와 변동성(variability)을 제공하여 효율적인 추정량(efficient estimator)을 얻을 수 있다.

본 논문의 분석에 있어서도 패널데이터의 장점이 이념별 ODA 규모분석에 적절하다고 생각되어 패널데이터를 수집, 분석하도록 설계하였다.

(2) 패널선형회귀모형

패널데이터를 이용한 선형회귀모형의 경우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존재하는데, 이는 각각 통합 최소자승(Ordinary Least Squares: OLS) 모형(Pooled OLS Model), 고정효과모형(Fixed Efeects Model), 변동효과모형(Random Effects Model)이다.

이들 모형은 오차항에 대한 가정에 따라 구분되는데, OLS 모형의 경우, 오차항의 기댓값이 0이라고 가정하고 분석을 한다. 이에 반해 고정효과모형에서는 오차항과 같은 관찰되지 않은 개별특성효과 (unobservable individual effect)를 패널 개체마다 고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추정해야할 모수(parameter)로 간주한다. 반면에 변동효과모형에서는 오차항을 확률변수(random variable)로 본다.

(3) 분석 방법 선정

본 연구의 목적은 원조 이념과 원조 규모와의 영향관계를 살펴보고 이를 이념별로 비교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적절한 분석 방법을 선택함에 있어서, 우선 통합 OLS모형 (Pooled OLS Model)은 타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생각된다. 통합 OLS 모형은 분석 대상 및 시간에 따른 특성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아야만 인과관계 추론의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다(김태일, 1997). 그러나 본 연구에서 국가별, 이념별 고유한 특성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개체별 누락된 변수를 모형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변동효과모형(Random Effects Model)과 고정효과

모형(Fixed Effects Model)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변동효과모형과 고정효과모형 중 어떤 분석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변수를 살펴보아야 알 수 있다. 고정효과모형의 경우 패널 개체 내의 변동을 이용하는 방법이며, 변동효과모형은 패널 개체 내와 개체 간의 변동을 모두 이용하여 독립변수의 효과를 추정하는 방법이다. 또한 고정효과모형과 변동효과모형의 선정에 있어서, 이들 모형의 상이한 가정인 독립변수와 개체특성효과를 반영한 오차항 간의 상관관계 존재여부를 고려할 수 있다. 독립변수와 오차항 간의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면 변동효과모형의 추정이 가장 효율적이나, 그렇지 않을 경우 고정효과모형의 추정이 타당할 것으로 보여진다[23].

다만, 사안에서는 통계프로그램 SAS의 mixed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을 진행하며, 국가더미변수와 연도더미변수를 포함하고 있어서 고정효과모형이 보다 타당하다고 생각되므로, 이하에서는 고정효과모형을 이용하여 분석을 진행하도록 한다.

2. 자료와 변수의 설명

(1) 분석자료

기본적인 ODA관련 데이터는 OECD(2015)의 ODA by Sector 및 OECD CRS 데이터를 이용하였고, 부족한 ODA 관련 데이터는 the World Bank(2015) 자료로 보충하였다.

국가 특성과 관련된 자료는 정부효율성 지표, 출산율, 기대수명, 무역수출액, 1차·2차·3차 산업 부가가치액 등은 World Bank에서 국가의 사회지표 파악을 위한 데이터에서 수집하였으며, 언론자유도는 공식적으로

23) 일반적으로 이에 대해서는 하우스만 검정(Hausman Test)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언론의 자유도를 파악하는 데 쓰이는 Press Freedom Index[24]로 파악하였다.

(2) 변수의 선정

1) 종속변수

종속변수의 경우 앞서 언급하였듯이, 본 연구의 목적과 관련된 전체 ODA 규모가 될 것이다. 이는 OECD(2015) 통계에서 수집하였으며 실제 지출액이 아닌 양허액 기준인데 양허액을 기준으로 삼은 이유는 실 지출액의 경우는 정부의 당초 의도와는 달리 경제, 정치, 사회적인 제약에 의해서 감액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 국가의 공적원조규모 결정 의도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 경제 인프라 및 생산관련 원조, 인도주의적 원조, 부채탕감액수가 두 번째 가설에서 언급된 종속변수인 섹터별 원조규모에 해당한다. 이 규모 역시 OECD(2015) 통계에서 수집하였으며, 양허액 기준이다.

세 번째 가설에서 언급된 각 섹터별 비중은 당해연도 OECD 통계상의 총 ODA 규모에서 차지하는 섹터의 비중으로 계산하였고, 이 역시 양허액 기준이다.

2) 독립변수

독립변수의 경우, 국가의 이념유형이 여기에 해당하며, 이는 자국이익추구, 인도주의적 목적, 정치·외교적 목적이다. 자국이익추구의 경우를 정치·외교적 목적 추구와 분리시킨 이유는 실제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주로 내세운다는 점과 정치·외교적 목적의 경우 경제적 이익과는 별개로

24) "Freedom of the Press"
https://www.freedomhouse.org/report-types/freedom-press#.VG1_evmsXik

식민지라는 특수성이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양자를 분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3) 통제변수

본 논문은 이념간 규모 차이에 대한 분석이므로, 동일 특성을 가진, 오직 이념만 다른 국가들 사이의 규모를 비교를 위해 선진 공여국의 특성을 다각도로 반영할 통제변수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분석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경제·사회 분야 각각의 특성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변수들을 통제변수로 선정하고자 노력하였다.

기본적으로 한 나라의 성장을 가늠할 수 있는 경제 지표로써 GDP 혹은 1인당 GDP를 활용한다(Solow, 1956; Mankiw et al., 1992;). 사안에서는 인구와 GDP를 각각 변수에 포함시키는 대신에 1인당 GDP를 포함시켰다. 또한 상품과 무역 수출액의 경우 역시 전통적으로 거시경제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이용되고 있으므로(정운찬·김영식, 거시경제론, 2012) 이를 거시경제 지표로 포함시켰다.

공여국의 정치적 측면을 반영하기 위해서 우선 언론자유도인 Press Freedom Index를 포함시켰다. 이는 언론자율성을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로, 프리덤하우스(Freedom House)의 언론자유 평가보고서(Press Freedom Survey)를 원자료로 하는 언론자유도(Freedom of the Press)는 프리덤 하우스에 의해 1993년부터 발표되고 있는데, 이는 특히 다수의 연구들에서 언론의 자유에 대한 대리지표로 사용되고 있다(Ahrend, 2002; Brunettia and Wederb, 2003;Chowdhury, 2004). 특히 이 지표는 언론의 보도에 있어 정치적 압력 및 통제(Political pressures and controls)에 따른 언론자유를 측정하고 있어서, 정치적 측면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으므로 변수에 반영하였다.

다음으로 선진국의 국가별 현황을 위한 지표 중 중 정부 및 거버넌스

측면을 반영한 정부효율성 지수를 포함시켰다. 이는 정부 및 공무원의 자질·서비스·정치적 중립성 등이 측정되는 것으로, 국가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World Bank의 전문가들이 개발한 국가관리지수(WGI, 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s)[25] 6가지 중 하나로 포함되어 있는 지수이다. 데이터 수집 역시 the World Bank를 통해 수집하였다.

선진국의 사회적 측면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기대수명을 변수로 포함시켰다. 기대수명은 0세 출생자가 향후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년수로서 0세의 기대여명을 뜻한다(KOSIS, 2015). 기대여명은 특정 연령까지 생존한 사람들의 기대되는 잔여생존연수로, 인구의 사망수준 및 건강상태를 포괄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이다(박유권,김성용, 2011). 따라서 기대수명의 경우 선진국의 보건 및 건강지표를 나타내어 준다는 측면에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선진국의 산업측면을 나타내기 위해 1차·2차·3차 산업 부가가치액을 변수로 포함시켰다. 실제 보편적으로 산업구조, 즉 산업간의 구성관계를 측정하는 기준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그 산업의 생산액(또는 부가가치)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취업노동력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대개의 경우 산업구조의 변동은 국민소득통계에 의한 부가가치기준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취업노동력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산업별 취업구조라는 표현을 많이 쓴다(박은태, 2011). 산업구조 파악을 위한 부가가치기준은 the World Bank나 OECD 등 국제기구에서도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동 데이터 역시 the World Bank에서 수집하였다.

(3) 변수의 설정

25) WGI란 200여 개 국가를 대상으로 6개 분야에 대한 지수로, World Bank에서 1996년 이후 연속성 있게 보여주고 있다. 지수를 개발한 경제학자 Daniel Kaufmann과 Aart Kraay의 이름을 따서 'KK지수' 라고도 한다.

본 논문의 독립변수 및 통제변수는 앞서 언급했듯이 1인당 국내총생산과 무역수출액, 언론자유도, 기대수명, 정부효율성지표, 1차·2차·3차 산업 부가가치액으로 설정했으며 달러 단위로 설정된 1인당 국내총생산과 무역수출액은 분석의 편의를 위해 자연로그로 변환하였다. 로그 변환을 하는 이유는 자료의 분산이 지나치게 커서 분산을 줄이거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비선형의 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 이를 선형의 관계로 바꾸어 주기 위함이다(고길곤, 2014).

본 논문의 종속변수는 국가의 총 ODA 규모 및 각 섹터별 사회 인프라, 경제 인프라, 인도주의적 원조, 부채탕감 및 생산관련 원조 규모이며 각각 달러단위로 설정되어 있는 바, 독립변수와의 단위 통일 및 분석의 편의를 위해 자연로그로 환산하였다. 이 외에 각 섹터별 비중(%) 역시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변수에 대한 설명은 이하 표에서 잘 나타나 있다.

<표 3> 변수의 설정

변수명	변수의 설명	출처
독립변수 및 통제변수		
1인당 국내 총생산	국내총생산/인구 (현재 USD 기준)	the World Bank
무역수출액	상품과 서비스 수출액 (현재 USD 기준)	the World Bank
언론자유도	프리덤하우스(Freedom House)의 언론자유 평가보고서(Press Freedom Survey) 상 언론자유도로 최소0에서 최대100사이이며, 낮을수록 언론자유도가 높음	https://www.freedomhouse.org
기대수명	연도별 기대수명	the World Bank
정부효율성지표	World Bank가 측정하는 지수로 −2에서 2사이이며, 높을수록 효율성이 높음	the World Bank
1차 산업 부가가치	농업, 어업, 임업 등을 포함한 1차 산업 부가가치액 (현재 USD 기준)	the World Bank
2차 산업 부가가치	제조업 등을 포함한 2차 산업 부가가치액 (현재 USD 기준)	the World Bank
3차 산업 부가가치	서비스업을 포함한 3차 산업 부가가치액 (현재 USD 기준)	the World Bank

변수명	변수의 설명	출처
종속변수		
ODA 규모	총 ODA (양허액 기준, 현재 USD 기준)	OECD CRS
사회인프라 ODA 규모	교육, 보건, 복지 등 사회전반과 관련된 인프라 원조 규모 (현재 USD 기준)	OECD CRS
경제인프라 ODA 규모	교통, 에너지, 금융 등 경제와 관련된 인프라 원조 규모 (현재 USD 기준)	OECD CRS
인도주의적 ODA 규모	빈민 구제 및 전쟁난민에 대한 원조 등 인도주의 원조 규모 (현재 USD 기준)	OECD CRS
부채탕감 규모	국가 채무에 대한 탕감과 관련된 원조 규모 (현재 USD 기준)	OECD CRS
생산관련 ODA 규모	농업 및 산업 전체의 생산관련된 원조 규모 (현재 USD 기준)	OECD CRS
사회인프라 ODA 비중	사회인프라 원조 규모/ 전체 ODA (%)	OECD CRS
경제인프라 ODA 비중	경제인프라 원조 규모/ 전체 ODA (%)	OECD CRS
인도주의적 ODA 비중	인도주의적 원조/ 전체 ODA (%)	OECD CRS
부채탕감 비중	부채탕감/ 전체 ODA (%)	OECD CRS
생산관련 ODA 비중	생산관련 원조/전체 ODA (%)	OECD CRS

제 4 장 분석 결과

제 1 절 기술통계

본 연구에 이용된 자료들에 대한 간단한 기술 통계를 돌리면 다음과 같다. 단 아래의 값들은 2013년도 각 이념별로 유형화한 ODA 규모 및 섹터별 규모의 평균, 표준편차, 최댓값, 최솟값이다.

연도는 전체 흐름의 추세를 반영하고, 연도에 대한 변화를 통제하기 위해 2000년부터 2014년까지 포함되었으나, 이념별로 각 해마다 큰 변동사항이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결측치가 가장 적고 데이터에 대한 이해가 용이한 가장 최근 데이터인 2013년도 자료만을 반영하였다[26].

<표 4> 2013년도 이념별 총 ODA 규모 및 섹터별 규모

(단위: 백만 달러)

		자국이익추구	인도주의적 원조	정치외교적이익
총 ODA	평균	7,800	2,870	8,100
	표준편차	10,100	2,410	7,320
	최솟값	1,170	429	488
	최댓값	31,500	5,830	17,900
사회 인프라	평균	2,910	767	2,060
	표준편차	4,490	673	2,180
	최솟값	237	135	145
	최댓값	13,700	1,800	5,670
경제 인프라	평균	1,550	159	1,170
	표준편차	3,080	161	1,710
	최솟값	19	4	17
	최댓값	8,970	487	4,310

26) 이하 자세한 연도별 기술통계는 부록으로 수록할 예정이다.

인도주의적 원조	평균	867	181	317
	표준편차	1,600	134	425
	최솟값	17	24	0
	최댓값	4,760	383	1,060
생산관련 원조	평균	531	233	281
	표준편차	589	290	259
	최솟값	77	16	1
	최댓값	1,540	766	710
부채탕감	평균	401	2	189
	표준편차	876	4	264
	최솟값	0	0	0
	최댓값	2,180	10	696
국가 수		8	8	6

2013년도의 자료를 살펴보면 산술평균을 비교해보았을 때, 총 ODA는 정치·외교 이익추구 국가들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자국이익추구, 인도주의적 목적추구 국가 규모 순이다. 이러한 기술 통계에서는 단순히 정치·외교 이익추구 국가의 ODA 규모가 크다고 나타났으나, 다양한 국가특성을 통제하고 유사한 특성을 가진 국가라고 가정했을 시 이념별 규모 차이는 이하 회귀분석결과에서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섹터별 규모 평균에 대해서도 살펴보면, 사회 인프라, 경제인프라, 인도주의적 원조 및 부채탕감, 생산관련 원조는 모두 자국이익추구 국가들의 규모가 가장 컸다. 따라서 정치·외교 이익추구 국가들은 상기에 나와있지 않은 다분야(multisector)나 미분류(unspecified) 혹은 프로그램 원조(programme assistance)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그러나 단순히 산술평균만으로는 이념별 규모에 대해 정확한 파악이 불가하고 이하에서 다양한 국가 특성에 대한 변수를 통제하고, 연도도 통제한 상태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이하 패널회귀분석에서 보다 자세히 분석하여 본다.

제 2 절 회귀분석결과

1. ODA 규모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다음은 고정효과모형을 통한 총 ODA 규모에 대한 회귀결과이다. 즉, 종속변수로 총 ODA(약정액 기준)를 설정하고, 국가 및 연도 이념변수를 더미변수로 설정하고, 국가특성 변수를 통제변수로 포함시켰다. 동 분석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독립변수는 이념변수이다.

〈표 5 〉 고정효과모형을 통한 총 ODA 규모 회귀결과

		총 ODA	
		계수값	표준오차
이념변수	상수항	21.8975***	3.6584
	자국이익 추구	0.801***	0.1613
	인도주의적 목적 추구	−0.6851***	0.1676
국가특성변수	1인당 GDP	0.01702	0.009249
	언론자유도	0.01969	0.01102
	순 수출액	−0.021	0.00764
	1차산업 부가가치액	−0.0134	0.01251
	2차산업 부가가치액	0.1102	0.0708
	3차산업 부가가치액	−0.09289	0.06604
	출산율	0.05387	0.1022
	정부효율성지수	−6.7913	6.3054
	기대수명	1.5642	4.3691
−2 Res Log Likelihood		163.8	
표본의 수		270	

* 동 표에서 국가변수와 연도변수가 포함되어 있으나, 지면의 문제상 생략하였다.

위 표에서는 별도로 표기되어 있지 않지만 국가와 연도를 통제한 후 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기 표에서는 국가특성변수 및 시간에 따른 변동 등을 통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념별로 각기 상이한 ODA 규모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념간의 차이를 보다 자세히 분석해보면, 자국이익추구이념의 경우는 기준이 되는 정치·외교적이익추구이념에 비해서 대략 123%정도 순 원조 규모가 높다. 이에 반해 인도주의 목적추구이념의 경우 정치·외교적이익 추구이념에 비해 50%가량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값은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규모의 차이는 일반적으로 인도주의를 추구하는 북유럽국가들에 비해, 미국, 일본 등 자국이익추구국가들의 원조규모가 절대적으로 높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이들 국가들은 경제규모 역시 매우 큰 국가들인데, 이러한 국가특성은 1인당 GDP나 수출액 등에서 통제되었다는 점에서, 상기 수치들이 국가 경제규모가 동일하다고 했을 때에도 이념별로 차이를 보인다는 점에서 상당히 흥미롭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전체 규모에서는 이념별 원조규모 차이에 대한 전반적 이해정도만 할 수 있으므로, 보다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이념별 전체 ODA 규모차이 외에 섹터에 따른 이념별 규모차이를 검토하여 본다.

2. 섹터별 규모 회귀분석결과

앞서 언급했듯이 전체 ODA 규모만을 비교하는 것은 이념별 원조규모의 전반적 차이에 대한 이해만을 할 수 있을 뿐이므로 보다 세부적으로 OECD에서 분류한 섹터별 규모를 살펴보는 것 역시 이념별 원조의 차이를 분석하는데 유의미할 것으로 사료된다. 단순히 전체 규모만을 보았을 때, 이념별 세부적인 차이를 알아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섹터는 OECD 분류에 따라 총 8가지로 나눠지며 이는 사회 인프라, 경

제 인프라, 인도주의적 원조, 생산관련 원조, 부채 탕감, 프로젝트 원조 외에 다분야(Multisector) 및 미분류분야(Unspecified)가 해당된다. 이 중에서 섹터별 분석과 관련하여 큰 의미가 없는 프로젝트 원조와 다분야 원조의 경우는 제외하고 분석을 진행한다.

사회 인프라의 경우, 학교, 병원 등과 같은 사회기반시설을 의미하며, 경제 인프라의 경우 경제활동을 위해 필수적인 기반시설로 교통, 에너지, 금융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생산관련 원조의 경우 농업, 어업과 같은 1차 산업 생산에서 서비스 산업과 같은 3차 산업의 생산 등을 모두 아우르는 생산과 관련한 지원이나 원조에 해당한다. 부채탕감의 경우 실제 공여국이 수원국의 채무를 조건부 혹은 조건 없이 탕감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하에서는 각 분야별 회귀결과를 논의하여 본다.

<표 6> 고정효과모형을 통한 섹터별 비중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사회 인프라	경제 인프라	인도주의 원조	생산관련 원조	부채탕감
자국이익 추구	1.2621*** (0.2074)	0.8601*** (0.3778)	1.4284*** (0.4115)	1.3151*** (0.2916)	−0.4243 (2.0914)
인도주의 목적추구	−0.8111*** (0.2164)	−1.165*** (0.3942)	−0.6953* (0.4278)	−1.2875*** (0.3042)	0.05981 (1.8248)
1인당GDP	−0.01336	−0.01528	−0.00802	0.01572	0.08464
언론자유도	0.008319	−0.04681	−0.01588	−0.04795*	0.06315
수출액	−0.03352***	−0.05385***	−0.05985***	−0.05862***	0.6092
1차산업 부가가치액	−0.01902	0.009845	−0.04014	−0.05488*	−0.08308
2차산업 부가가치액	0.1946**	0.0697	0.2142	0.1709	0.0704
3차산업 부가가치액	−0.1694*	−0.09157	−0.1648	−0.1413	0.437
출산률	0.05303	0.155	0.1845	0.2908	0.3915

정부효율성	−16.406*	−27.0126	−16.4771	−8.2196	−33.3764
기대수명	−3.3632	−22.791*	−1.8333	−2.3648	−0.3678
−2 Res Log Likelihood	274.1	545.1	577.4	428.0	717.1
표본의 수	268	268	266	268	168

* 국가더미변수와 연도더미변수는 표기의 편의상 생략되었다.

* 괄호안은 표준오차값

* (* $P \leq 0.1$, ** $P \leq 0.05$, *** $P \leq 0.01$)

우선 사회인프라의 경우, 자국이익추구 원조이념을 가진 국가들의 절대적인 ODA 규모가 다른 두 원조이념을 지향하는 국가들에 비해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자국이익추구의 경우 기준이 되는 정치외교이익추구와 비교해보았을 때, 253%정도 더 높은 수준으로 사회 인프라에 대한 원조를 하고있으며, 인도주의적 이념추구 국가들은 정치외교이익추구와 비교해 보았을 때 대략 55% 작은 수준으로 사회 인프라 분야에 원조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값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나타났다. 이는 사회인프라 자체가 사회기반시설 구축을 통해 간접적으로 자국 기업들의 진출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자국이익추구이념 국가들이 사회 인프라에 대한 원조를 할 유인이 존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실제 일본의 경우, 동 국가의 원조투자국 1위인 미얀마에서 다양한 종류의 사회인프라 구축에 힘쓰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민간기업유치에 힘쓰고 있다.

경제 인프라의 경우도 앞서 살펴본 사회 인프라와 마찬가지로, 국가특성을 반영하는 변수들을 통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국이익추구이념 국가들이 다른 두 이념을 표방하는 국가들에 비해 절대적으로 더 많은 규모의 원조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값들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수치로는 자국이익추구국가가 기준이 되는 정치외교이익추구국가에 비해 약 136% 더 높은 수준의 경제 인프라 관련 원조를 진행하고 있으며, 인도주의 이념을 추구하는 국가의 경우 대략 66.8% 낮은 수준의 경제 인프라 관련 원조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자국의 경제 실익을 추구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는 자국이익추구목적을 가진 국가들에게는 당연한 결과로 보인다. 실제 미국과 일본은 경제적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다양한 경제분야 인프라 구축과 관련한 원조를 진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앞서 언급했듯이 일본의 경우, 미얀마에 원조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데, 그 중에서도 경제 인프라 분야가 두드러지게 많았다.

자국이익추구국가들의 경우 오히려 인도주의이념 국가들과는 달리 인도주의적 원조규모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알 수 있다.

보다 자세하게 분석해보면, 국가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들 및 시간에 따른 변수를 통제하고 이념간의 비교만을 보았을 때, 자국이익추구 국가들의 경우 정치·외교이익을 추구하는 국가들에 비해 인도주의적 원조규모가 317%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주의적 이념을 표방하는 국가의 경우는 정치·외교이익 추구국가보다 오히려 대략 50% 정도 낮은 규모의 원조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의 경제지표를 나타내는 1인당 GDP나 수출액 등을 통제한 상황에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자국이익추구의 이념을 표방하는 국가들이 비록 일차적으로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더라도 공적원조의 본래 취지인 인도주의적 취지를 배제하고 있는 것은 아님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또 다른 해석가능성은 인도주의적 목적을 추구하는 국가의 경우, 수원국을 실질적으로 돕기위한 원조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선심성 원조나 수원국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는 형식의 원조는 배제하고 있다. 즉, 인도주의적 원조를 지원할 때 수원국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방향으로 원조를 진행하기 위해 체계적인 기준을 가지고 여러 단계의 심사를 거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 수원국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방향으로 재원이 쓰일 수 있도록 지원을 하다보니, 실제 규모면에서는 작아지는 결과를 가져왔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부분은 원조의 효율성에서 다뤄질 수 있는 부분인데, 자국이익추구국가처럼 규모면에서 두드러지는 것과 인도주의 목적추구 국가들과같이 질적인 측면 집중하는 원조 중 어떤 쪽이 더 올바른지는 아직까지 논란의 여지가 존재한다.

상기 표에서는 경제적 이익과는 큰 관계없는 부채탕감과 관련해서는 인도주의 목적을 추구하는 국가들이 더 많은 규모로 원조를 진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른 분야에서 비교적 큰 규모로 원조를 진행하던 자

국이익추구국가의 경우, 부채탕감은 다른 원조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적으므로, 지원이 대규모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인도주의 국가들의 경우에는 부채로 인해 수원국의 경제적 리스크가 커지고, 부채로 인한 투자규모가 줄어든다는 점에서 수원국 경제발전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크므로 인도적 차원에서 원조를 지원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생산분야에서는 앞선 결과들과 유사하게 자국이익추구 국가들의 생산분야 원조의 규모가 타 이념을 추구하는 국가들에 비해 큰 것을 알 수 있다. 세밀하게 보자면, 자국이익추구국가의 경우 기준이 되는 정치·외교이익추구 국가에 비해서 약 275% 정도 생산과 관련된 원조에서 규모 차이가 존재한다. 이에 비해, 인도주의 목적을 추구하는 국가의 경우 약 72.4% 가량 비교의 기준이 되는 정치·외교이익추구 국가에 비해 규모가 작음을 알 수 있다.

자국이익추구 국가가 실질적으로 인도주의 목적 추구 국가에 비해서 수원국의 생산과 관련된 지원을 더 많이 하고 있으며, 이는 국익의 차원에서 공여국 위상 및 이미지 제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간접효과에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상기 결과에 따르면 자국이익추구 국가들이 자국이익과는 무관한 부채탕감을 제외하고는 다양한 분야에 대규모 원조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는 사회, 경제 인프라 분야뿐만 아니라, 간접적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생산분야와 국익창출과는 다소 무관해 보이는 인도주의적 원조 분야에서도 동일하다. 이를 통해서 국익을 추구하는 국가의 경우, 자국에도 이익이 되면서 수원국 인프라 구축에 큰 도움이 되는 인프라 분야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인도주의적 원조에 소홀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상기의 분석의 경우는 여러 가지 보완해야할 점을 포함하고 있는데, 우선 실제 이념상의 문제와 무관하게 자국이익추구 국가들이 대국이며, 그렇기 때문에 원조규모도 높다는 결과로 보일 수도 있다. 따라서 전체

ODA 대비 규모 비중도 살펴보아야 보다 정확한 분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인도주의적 목적을 추구하는 국가의 경우 실제 절대적 원조 규모가 작은 북유럽 국가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전체 원조 대비 비중에 대한 회귀결과를 분석하여 본다.

3. 섹터별 비중의 회귀분석결과

다음은 앞선 언급했듯이 전체 ODA 중 섹터의 비중을 종속변수로 설정한 회귀분석이다[27].

이러한 비중에 대한 회귀분석의 경우, 비록 통제변수에서 국가 특성을 반영한 1인당 GDP, 무역수출액 등을 포함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경제 규모에 따른 원조 규모 차이를 모두 통제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절대적 비중만을 비교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따라서 상대적인 비중에 대한 비교를 위해 섹터별 비중을 분석하는 것이 이러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27) 이때 독립변수에서 1·2·3차 산업의 경우 분석의 편의상 변수에서 제외하였다.

<표 7> 고정효과모형을 통한 섹터별 비중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사회 인프라(%)	경제 인프라(%)	인도주의원조(%)	부채탕감(%)	생산관련원조(%)
자국 이익 추구	1.2082** (0.3984)	0.2652** (0.1177)	0.2414*** (0.03475)	0.8279* (0.4328)	0.2503*** (0.0458)
인도주의 목적추구	0.8237** (0.3578)	0.1867* (0.1057)	0.161*** (0.03121)	0.6437* (0.3885)	0.1779*** (0.04114)
정치·외교적 목적추구	0.9802** (0.3978)	0.2123* (0.1175)	0.1664*** (0.03459)	0.8618** (0.4325)	0.2258*** (0.04574)
1인당 GDP	−0.0234**	−0.00451	−0.00132	−0.02577**	−0.00156
언론자유도	−0.01279	−0.00041	−0.00252*	−0.01684	−0.00502***
출산율	−0.02827	0.02823	−0.00664	−0.03519	−0.00218
순 수출액	−0.00621	−0.00489*	−0.00077	−0.0056	−0.0023**
정부효율성 지수	−0.9714	0.4498	−0.4382	−2.6949	0.007812
−2 Res Log Likelihood	197.7	−368.0	−929.9	209.3	−806.0
표본의 수	270	270	269	249	270

* 국가더미변수와 연도더미변수는 표기의 편의상 생략되었다.

* 괄호안은 표준오차값

* (* $P \leq 0.1$, ** $P \leq 0.05$, *** $P \leq 0.01$)

상기 결과에 따르면 비중에 있어서 통제변수를 통해 각 이념별로 동일 특성을 지닌 국가라고 가정했을 때에도 여전히 이념별로 비중의 차이가 존재했다. 부채탕감 비중을 제외하고는 자국이익추구 국가들의 경우 전체 ODA 중 사회 인프라, 경제 인프라, 인도주의적 원조, 생산관련 원조의 비중이 타 이념을 추구하는 국가들에 비해 각각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값들은 대부분 0.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 인프라 비중과 부채탕감에서 나타난 값을 제외하고는 0.05 유의수준 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결과는 자국이익추구 국가들이 자국의 ODA 정책을 수립할 때 사회 및 경제 인프라와 같은 자국기업 유치와 관련된 분야에 집중투자할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타 이념들을 추구하는 국가들에 비해 인도주의적 원조에도 투자비율이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는 상식적으로 유추 가능한 결과와 배치되는 것으로, 자국이익추구를 자국의 원조이념으로 표방하고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자국이익추구만을 위해서 원조정책 포트폴리오를 구상하기 보다는 국익과 수원국의 이익을 동시에 고려하여 인도주의적 분야 역시 원조를 소홀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원조방향은 수원국과 공여국이 모두 공적원조를 통해서 이익을 창출하는 Win-win ODA에 한층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제 5장 결론

제 1 절 가설검증

앞서 세웠던 3가지 가설과 관련하여서 상기 분석결과를 통해서 가설에 대한 검증을 진행하고자 한다.

1. 이념별 국가들의 원조규모의 차이가 존재한다.
2. 이념별로 각 섹터간 원조규모의 차이(원조배분의 차이)가 존재한다.
 2-1. 이념별로 사회인프라 원조규모의 차이가 존재한다.
 2-2. 이념별로 경제인프라 원조규모의 차이가 존재한다.
 2-3. 이념별로 인도주의적 원조규모의 차이가 존재한다.
 2-4. 이념별로 생산분야 원조규모의 차이가 존재한다.
 2-5. 이념별로 부채탕감분야 원조규모의 차이가 존재한다.
3. 국가 이념별로 국가원조배분 비율의 차이가 존재한다.
 3-1. 이념별로 사회인프라 원조비율의 차이가 존재한다.
 3-2. 이념별로 경제인프라 원조비율의 차이가 존재한다.
 3-3. 이념별로 인도주의적 원조비율의 차이가 존재한다.
 3-4. 이념별로 생산분야 원조비율의 차이가 존재한다.
 3-5. 이념별로 부채탕감분야 원조비율의 차이가 존재한다.

연구가설 1의 경우, 우선 국가특성에 대한 변수를 통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각 이념별로 공적원조규모에 차이가 나타났음은 사실로 나타났다. 특히 값을 비교해 봤을 때, 자국이익추구 국가들의 경우 그 규모가 다른 두 이념에 비해 크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정치·외교적 이익추구 국가,

인도주의적 목적추구 국가가 순서대로 뒤따랐다.

연구가설 2의 경우, 섹터별로 실질적으로 원조규모가 이념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났다. 특히, 사회 인프라, 경제 인프라, 인도주의적 원조, 생산관련 원조에서는 자국이념추구국가들의 원조규모가 타 이념에 비해서 높다는 것 까지 검증할 수 있었다. 이는 국가특성에 대한 변수를 통제하여서 그러한 국가특성이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나타난 것이므로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부채탕감의 경우에도 원조규모에 차이가 났지만 규모면에서 인도주의적 원조추구 국가들이 타 이념에 비해 더 높은 규모로 부채탕감을 해주었다는 점은 특이할만한 점으로 나타났다.

연구가설 3에서는 섹터별 비중과 관련하여 이념에 따른 차이점이 존재하는가 여부였는데, 이에 대해서 역시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 절대적인 비중이 아닌 상대적인 비중에 대한 비교이므로 절대적 원조 규모가 높은 국가들에 대한 편중된 결과로 비춰질 수 있는 연구가설 2에 대한 보완할 결과로 나타났다. 특히 각 섹터별로 검토하였을 때도 연구가설 2와 크게 다른 점이 없었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결과로 나타났다.

제 2 절 연구의 요약 및 함의

본 논문은 선진 공여국의 원조배분과 관련하여 원조규모결정요인 중 특히 이념과 관련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분석을 진행하였다. 선진국의 원조배분 행태 및 원조규모결정에는 다양한 요인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동 국가가 원조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목적과 그 목적이 함축된 국가의 원조이념에 따라서 원조규모가 어떻게 결정되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즉, 국제개발학에 따른 각 국가의 원조 목적에 따른 이념별 원조결정규모나 원조 구성의 차이에 대해 자세한 분석을 위하여, 고정효과모형을 이용한 패널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선진공여국의 국가특성변수인 1인당 GDP, 무역수출액, 각 산업의 부가가치액 및 공여국의 정부정책의 방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효율성지수, 공여국의 사회적 특성을 반영하는 출산율, 기대수명 등을 통제한 상황에서, 이념에 따른 총 ODA 원조규모 및 섹터별 원조규모, 섹터별 원조의 구성의 차이 및 특징에 대해 가설을 세우고 이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념은 국제개발학에서 분류한 자국이익추구 목적, 인도주의적 목적, 정치·외교 목적(Lancaster, 2007)에 따라 세 가지로 유형화 하였고, 각 국가별 국제개발과 관련된 법안이나 시행안, 그리고 보충적으로 OECD peer review를 통하여 각 국가의 이념을 파악하여, 세 가지 유형에 따라 분류하였고, 이념을 더미변수로 설정해 세 가지 이념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전체 원조규모와 관련해서는 자국이익추구 이념을 표방하는 국가들이 다른 이념을 표방하는 국가들에 비하여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평균적으로 규모가 크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이는 자국이익을 추구하는 국가들인 미국, 일본 등의 원조규모가 평균적으로 타 공여국들에 비해

크고, 이들은 이러한 대규모 원조를 통해서 민간기업과의 연계 및 기업 진출의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세부적인 섹터별 규모에 관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자국이익추구 국가들이 자국이익과는 무관한 부채탕감을 제외한 사회, 경제 인프라 및 생산관련 원조 그리고 더불어 부채탕감과 같이 자국이익추구와는 무관해 보이는 인도주의적 원조 분야에까지 평균적으로 타 이념을 표방하는 국가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원조를 주고 있다는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대부분 0.05 유의수준 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므로 분석에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부채탕감의 경우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는 나오지 않았으나, 다른 섹터에서 나온 결과와는 달리, 인도주의적 원조가 가장 높은 수치를 차지하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자국이득을 추구하고자 하는 국가의 입장에서, 자국 기업의 진출이나 수출 증대등에 직접적으로 연결된 사회·경제 인프라 및 생산관련 원조는 집중하고 있으나, 이러한 자국이익과는 직, 간접적으로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부채 탕감 규모는 작은 것으로 판단된다.

부채 탕감 분야를 제외한 이외의 섹터 결과는 실질적으로 민간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직,간접적으로 제공하는 사회, 경제 인프라 분야뿐만 아니라, 수원국의 수입을 늘려 무역이윤 창출 및 민간 기업 진출과 같은 간접적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생산분야의 경우는 원조를 통해서 국익을 추구할 수 있는 분야이므로 의미있는 결과라고 보여진다.

인도주의적 원조의 경우에 대한 결과는 자국이익추구국가들의 원조규모가 다른 두 이념에 비해서 더 높게 나타났다. 표면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인도주의적 원조를 통해 국가이미지를 제고하고, 수원국 국민들에게 국가브랜드 창출 및 홍보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익추구 국가들이 이러한 점에서 인도주의적 원조 역시 정책적으로 크게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간접적 효과의 경우, 한류와 같은 문화외교 정책에서 알 수 있듯이 직접적

인 수익추구보다는 기대수익이나 단기 순익은 낮지만 장기적 측면에서는 국익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에서 증명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절대적 규모 부문뿐만 아니라 전체 ODA 중 섹터별 비중에 대한 분석에 있어서도 역시 부채탕감 비중을 제외하고는 자국이익추구 국가들의 경우 전체 ODA 중 사회 인프라, 경제 인프라, 인도주의적 원조, 생산관련 원조의 비중이 타 이념을 추구하는 국가들에 비해 각각 평균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분석의 결과 값들은 모두 0.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국이익추구 국가들이 자국의 ODA 정책을 수립할 때 사회 및 경제 인프라와 같은 자국기업 유치와 관련된 분야에 집중투자할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타 이념들을 추구하는 국가들에 비해 인도주의적 원조에도 투자비율이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는 상식적으로 유추 가능한 결과와 배치되지만 앞서 언급하였듯이, 자국이익추구를 자국의 원조이념으로 표방하고 있다 하더라도 인도주의적 원조자체가 장기적 측면에서 국익과 무관하지 않다는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국익의 측면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실질적으로 자국이익추구만을 위해서 원조정책 포트폴리오를 구상하기 보다는 국익과 수원국의 이익을 동시에 고려하여 인도주의적 분야 역시 원조를 소홀하고 있지 않다고 해석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절대적인 규모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한정된 원조 재원의 선택과 집중의 측면에서 인도주의적 분야에 대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타 이념을 선택한 국가 특히 인도주의적 목적을 표방하는 국가들에 비해서도 그 비중이 높다는 것은 단순히 인도주의적 원조가 장기적인 이익이 된다는 측면뿐만 아니라 그 국가가 추구하는 정책의 방향성에 인도주의적 측면에 포함되어 있다는 나타낸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또 다른 해석은 인도주의적 목적을 추구하는 국가의 경우에 수원국을 진정으로 돕기위한 원조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선심성 원조나 수원국의 요구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원조는 배제하고 있다. 즉, 인도주의적 원조를 지원할 때,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 수원국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방향으로 재원이 쓰일 수 있도록 원조정책을 운영하다보니 실제 규모면에서는 다른 이념에 비해 작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자국이익추구 국가의 측면으로 돌아와서, 이들 국가가 추구하는 방식 즉, 자국이익을 추구하면서도 동시에 수원국의 이익에 대해 고려하는 원조방향은 원조결정요인에서 설명한 다양한 이론들이 증명한 복합요인이 반영된 결과이기도 하다. 앞서 언급했듯이 한 국가가 중점으로 표방하는 이념이 있다 하더라도 공적원조가 시작된 애초의 목적인 수원국의 발전과 빈곤척결과 같은 목적이 완전히 배제될 수 없으며, 두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자국이익을 추구하는 국가들의 경우, 점점 부족해지는 공적원조 재원에 민간재원을 끌어들일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여 오히려 ODA의 폭을 넓히고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이러한 자국이익추구 이념의 경우, 수원국과 공여국이 모두 공적원조를 통해서 이익을 창출하는 Win-win ODA에 가깝게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념과 관련하여서 자국이익을 추구하는 선진공여국의 경우, ODA의 본래 목적과 가치에 어긋난다는 비난을 받고 있으나, 본 연구에 따르면 동일한 사회, 경제적 국가 특성을 지닌 국가들이라는 가정 하에 자국이익추구 이념을 표방하는 국가들이 실질적으로 수원국의 이익을 배제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자국이익추구 이념을 따르는 국가들의 경우 오히려 수원국의 수요에 부합한다면 Win-win ODA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인도주의적 원조 규모가 크고 이에 대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타 이념에 비해 높다고 하여서 반드시 수원국 수요에 부합하는 ODA를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진정한 Win-win ODA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수원국의 정책적 우선순위 같은 수요를 파악하여 동반자적 파트너쉽을 가지고 원조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제 3 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본 연구에서는 공여국의 원조배분과 관련하여 이념별 원조규모 및 섹터당 규모, 비중에 초점을 맞추어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점에서 한계점을 갖는다.

첫 번째로 국가특성과 관련된 변수의 선정과 관련하여 누락된 변수(Omitted Variable)의 문제가 존재한다. 국가특성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경제·사회 측면뿐만 아니라 정치적 측면 역시 반영해야 한다. ODA도 역시 일국의 정책의 하나이며, 이러한 정책의 방향성은 정치체계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 그러한 정치적 변수를 통제변수로 포함하지 못한 점에서 편의(bias)가 발생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이러한 다양한 국가특성 변수를 포함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두 번째로 분석연도와 관련하여 2000년부터 2014년으로 설정을 하였으나, 국제원조체계가 진행되어온 시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고정효과모형의 경우 개체 내의 정보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분석 연도가 충분히 길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또한 국가별 정보이므로 개인적으로 조사가 불가하므로 공식 데이터만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데이터 수집의 한계로 인해 누락된 자료가 있다는 점도 본 연구의 한계점에 해당할 것이다.

세 번째로, 본 연구에서는 원조의 큰 틀에서 원조배분과 관련해서만 초점을 맞추어 공여국데이터만 분석하였고, 수원국의 측면에서 개발원조의 성과와 연결시키지 못한 점이다. 이와 관련된 후속 연구에서는 공여국들의 원조 결정유형의 하나인 이념과 개발원조 성과 간의 관계에 대한 분석결과를 도출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네 번째로, 비중분석과 관련하여 회귀모형으로 분석할 때, 국가별 비교를 용이하게 하고자 비교분석에서 큰 의미를 갖지 않는 상수항을 제외하

고 상수항이 없는 회귀모형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한계점을 가진다. 실제 상수항이 없는 회귀모형에 비해서 상수항을 갖는 회귀모형의 적정성이 높다는 것이 학계의 지배적인 의견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은 이념과 관련하여 규모나 비중과 같은 양적(quantitative) 분석만을 주된 분석으로 삼고, 개별 국가들이 실제 원조의 현장에서 진행하고 있는 질적인(qualitative) 모습을 담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한계점을 갖는다. 따라서 원조 이념과 관련한 원조배분과 관련하여 각 국가의 원조담당기관의 인터뷰 등 질적 방법이 추가로 수행된다면 본 연구의 분석결과 타당성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강선주. 2001. 미국의 세계교육을 둘러싼 논쟁. [The Controversy over Global Education in the United States: The Pluralistic View and the National Interest View]. 미국사연구, 14, 157-181.

고길곤. 2014. 통계학의 이해와 활용, 문우사.

구정우·김대욱. 2011. 세계사회와 공적개발원조: 한국 ODA 결정요인 분석, 1989-2007. 한국사회학, 45(1), 153-190.

권율. 2006."최근국제개발협력환경변화와민간부문의역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명신. 2013. 인도주의와 국익의 논쟁을 넘어서는 한국의 스마트 ODA 전략: 포터와 크레머의 공유가치 이론을 통한 한국ODA전략의 재정향,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지유. 2012. 한국의공적개발원조(ODA)추진체계변화연구, 경희대학교 정치학과 석사학위 논문.

김태일. 1997. "행정학분야 논문에 사용된 통계기법들의 분석". 한국행정학보. 31(3):19-35.

민익식·최필선. 2009.『STATA 패널데이터 분석』. 서울: 한국STATA 학회

박선주. 2015. 한국의 ODA 시행체계 고찰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한 결정요인분석: 농업 및 농촌개발부문, 건국대학교 국제박사학위 논문.

박유권,김성용. 2011, "우리나라자료에적합한생명표작성방법에대한연구", 응용통계연구, 24(5), pp.769-789.

박은태. 2011. 경제학사전, 경연사

서용석. 2011. 선진국 oda 정책의 효과성 분석에 관한 연구 (Vol. 2011-30): 한국행정연구원.

서창록. 2010. Theoretical Considerations : Why countries provide development aids 『국제관계연구』, 제15권 제1호(통권 제28호), 192-217.

이계우. 2011. 공적개발원조 배분정책과 실적: 선진국과 한국의 비교. 한국개발연구원.

이석원. 2006. 고령화 관련 재정지출의 적정규모 산출, 한국행정학보

이석원. 2003. 세계화와 복지정책: OECD 국가들에 대한 경험적 분석, 한국정책학회보

이희진· 문경희 외. 2011. 현대 호주 사회의 이해1,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호주연구센터, 한국학술정보(주)

임소진. 2013. 공여국의 개도국 정부 역량개발 지원체제. 한국국제협력단.

_____. 2015. 원조형태(type)에 따른 국익추구 패턴분석 : 동아시아와 서유럽 공여국 비교연구.

정운찬·김영식, 2012, 거시경제론, 율곡출판사.

정창호. 2010. OECD의 TIED 원조규제가 우리나라 ODA에 미치는 영향.

최충익. 2008. “패널모형: 시계열 분석과 횡단면 분석을 한번에”. 『국토연구』. 320:120-127

한국국제협력단. 2008. 개발협력사업평가 가이드라인.

한국국제협력단. 2013. 2012년도 평가연보. ODA 평가 2013-01-180.

한국수출입은행. 2014. Annual Report 2014. 한국수출입은행 대외협력기금.

한국수출입은행. 2014. Post-2015 시대를 대비한 EDCF 전략방향 - 국제개발협력의 재원조달방식을 중심으로- 연구용역보고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한국수출입은행.

Alesina, A., & Weder, B. 2002. Do corrupt governments receive less foreign aid? , 92(4), 1126-1137.

Alesina, A., & Dollar, D. 2000. Who gives foreign aid to whom and why? Journal of economic growth, 5(1), 33-63.

Bandyopadhyay, S., & Wall, H. J. 2007. The determinants of aid in the post-cold War Era. Federal Reserve Bank of St. Louis Review.

Browne, S. 1990. Foreign Aid in Practice.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Berthelemy, J. C. 2006. Bilateral donors' interest vs. recipients' development motives in aid allocation: do all donors behave the same? Review of Development Economics, 10(2), 179-194.

Dollar, D., & Kraay, A. 2002. Growth is Good for the Poor. Journal of economic growth, 7(3), 195-225.

Dollar, D., & Levin, V. 2006. The Increasing Selectivity of Foreign Aid, 1984 - 2003. World Development, 34(12), 2034-2046.

Easterly, William. 2007. The White Man's Burden: Why the West's Efforts to Aid the Rest Have Done So Much Ill and So Little Good. New York: Penguin Books.

Guyana, N. a. 2015. Elements. International, O. I. a. D. F. (2015). Financing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Lessons from Government Spending on the MDGs.

Lancaster, C. 2007. Foreign Aid : Diplomacy, Development, Domestic Politics. 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Lumsdaine, D. H. 1993. Moral Vision in International Politics: The Foreign Aid Regime. 『Princeton University Press』.

McKinlay, R. D. 1978. The German aid relationship: a test of the recipient need and the donor interest models of the

distribution of German bilateral aid 1961–70.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6(3), 235-257.

McKinlay, R. D., & Little, R. 1977. A foreign policy model of US bilateral aid allocation. World Politics, 30(01), 58-86.

Morgenthau, H. 1962. A Political Theory of Foreign Aid,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56(No 2), 301.

Neumayer, E. 2003. Do Human Rights Matter in Bilateral Aid Allocation? A Quantitative Analysis of 21 Donor Countries. Social Science Quarterly, 84(3), 650-666.

_____. 2005. The Pattern of Aid Giving: The Impact of Good Governance on Development Assistance

OECD. 2005. Managing Aid: Practices of DAC Member Countries. DAC Guidelines and Reference Series.

Riddell, R. C. 2007. Does Foreing Aid Really Work? .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Peter J. Schraeder, Steven W. Hook, & Bruce Taylor. 1998. Clarifying the Foreign Aid Puzzle : A Comparision of American, Japanese, French, Swedish Aid Flows. 『World Politics』, 50 No 2, 294-323.

Sogge, D. 2002. Give and Take: What's the Matter with Foreign Aid? New York: New York : Zed Books Ltd.

Trumbull, W. N., Wall, H. J. 1994. Estimating aid-allocation criteria with panel data. The Economic Journal, 876-882.

Wood, R. E. 1986. From Marshall Plan To Debt Crisis : Foreign Aid And Development Choices In The World Economy.

웹사이트 자료

The World Bank, 2014,
(http://data.worldbank.org/indicator/DT.ODA.ALLD.CD?page=6)
The World Bank, 2014,
(https://data.oecd.org/gdp/real-gdp-forecast.htm)
The World Bank, 2014,
(https://data.oecd.org/gdp/real-gdp-forecast.htm)
OECD, 2013,
(http://www.oecd-ilibrary.org/development/development-aid-net-official-development-assistance-oda_20743866-table)
국무조정실, (www.odakorea.go.kr)
수출입은행, 'ODA 역사'부분, (www.edcfkorea.go.kr)

<부록>

〈표 8〉 자국이익추구원조 (2000-2007)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총 ODA	평균	4,530.0	4,620.0	5,080.0	5,260.0	5,720.0	8,170.0	6,950.0	
	표준편차	5,230.0	5,080.0	5,640.0	6,590.0	7,670.0	10,600.0	8,660.0	
	최소값	79.1	402.0	398.0	481.0	520.0	819.0	461.0	
	최대값	13,000.0	14,600.0	16,700.0	20,100.0	23,600.0	32,400.0	26,500.0	
	N	8	8	8	8	8	8	8	
사회 인프라	평균	1,380.0	1,270.0	1,480.0	2,130.0	2,410.0	2,640.0	2,440.0	
	표준편차	1,790.0	1,860.0	2,160.0	2,870.0	4,200.0	4,550.0	4,010.0	
	최소값	150.0	85.7	229.0	180.0	202.0	235.0	252.0	
	최대값	5,120.0	5,570.0	6,460.0	8,790.0	12,600.0	13,600.0	12,100.0	
	N	8	8	8	8	8	8	8	
경제 인프라	평균	817.0	643.0	665.0	577.0	1,280.0	987.0	1,030.0	
	표준편차	1,470.0	1,450.0	1,350.0	1,180.0	2,230.0	1,590.0	1,670.0	
	최소값	11.0	8.5	16.7	13.3	7.7	11.3	18.1	
	최대값	4,140.0	4,210.0	3,940.0	3,480.0	5,600.0	4,150.0	3,790.0	
	N	8	8	8	8	8	8	8	
인도주의적 원조	평균	197.0	198.0	318.0	513.0	550.0	787.0	566.0	
	표준편차	251.0	290.0	545.0	1,170.0	1,040.0	1,550.0	1,040.0	
	최소값	0.7	8.0	2.9	3.7	8.9	40.1	14.9	
	최대값	782.0	891.0	1,650.0	3,390.0	3,060.0	4,590.0	3,130.0	
	N	8	8	8	8	8	8	8	
생산관련 원조	평균	294.0	385.0	342.0	404.0	456.0	494.0	407.0	
	표준편차	371.0	622.0	498.0	536.0	657.0	732.0	572.0	
	최소값	7.4	8.0	10.3	20.0	18.5	29.3	20.8	
	최대값	1,070.0	1,790.0	1,210.0	1,450.0	1,910.0	1,930.0	1,420.0	
	N	8	8	8	8	8	8	8	
부채탕감	평균	277.0	311.0	435.0	1,390.0	392.0	1,850.0	1,210.0	
	표준편차	458.0	646.0	438.0	2,470.0	857.0	2,280.0	1,390.0	
	최소값	0.0	0.0	0.0	0.0	0.0	4.6	0.0	
	최대값	1,350.0	1,880.0	1,080.0	6,900.0	2,500.0	5,940.0	4,100.0	
	N	8	8	8	8	8	8	8	

<표 9> 자국이익추구원조 (2008-2014)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총 ODA	평균	7,130.0	7,020.0	7,460.0	7,550.0	7,390.0	7,800.0	7,580.0
	표준편차	9,020.0	9,890.0	10,300.0	10,200.0	9,890.0	10,100.0	10,300.0
	최소값	899.0	1,010.0	1,270.0	1,090.0	1,160.0	1,170.0	1,130.0
	최대값	28,400.0	30,800.0	32,000.0	31,900.0	31,100.0	31,500.0	32,200.0
	N	8	8	8	8	8	8	8
사회 인프라	평균	3,210.0	3,320.0	3,240.0	3,150.0	2,760.0	2,910.0	83.8
	표준편차	5,730.0	5,670.0	5,640.0	5,350.0	4,310.0	4,490.0	187.0
	최소값	325.0	249.0	285.0	270.0	172.0	237.0	0.0
	최대값	17,200.0	17,000.0	17,000.0	16,200.0	13,100.0	13,700.0	419.0
	N	8	8	8	8	8	8	5
경제 인프라	평균	1,580.0	1,130.0	1,530.0	1,080.0	1,150.0	1,550.0	
	표준편차	2,560.0	1,680.0	2,630.0	1,780.0	1,960.0	3,080.0	
	최소값	46.7	5.7	63.7	28.5	51.9	18.8	
	최대값	6,500.0	4,520.0	7,310.0	5,200.0	5,680.0	8,970.0	
	N	8	8	8	8	8	8	
인도주의적 원조	평균	791.0	803.0	987.0	787.0	754.0	867.0	
	표준편차	1,620.0	1,710.0	2,010.0	1,410.0	1,390.0	1,600.0	
	최소값	43.8	3.6	22.6	15.5	17.3	17.1	
	최대값	4,790.0	5,020.0	5,920.0	4,230.0	4,150.0	4,760.0	
	N	8	8	8	8	8	8	
생산관련 원조	평균	657.0	491.0	589.0	507.0	522.0	531.0	
	표준편차	930.0	662.0	832.0	621.0	623.0	589.0	
	최소값	26.0	25.0	30.7	16.8	23.7	77.3	
	최대값	2,220.0	1,940.0	2,510.0	1,760.0	1,660.0	1,540.0	
	N	8	8	8	8	8	8	
부채탕감	평균	653.0	95.9	89.0	258.0	46.9	401.0	
	표준편차	915.0	81.4	93.2	424.0	69.0	876.0	
	최소값	11.6	0.0	2.6	0.0	0.0	0.0	
	최대값	2,800.0	191.0	262.0	1,070.0	194.0	2,180.0	
	N	8	8	8	8	8	6	

<표 10> 인도주의 원조 (2000-2007)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총 ODA	평균	2,100.0	2,150.0	2,220.0	2,170.0	2,170.0	2,520.0	2,640.0	
	표준편차	1,990.0	1,990.0	1,990.0	1,940.0	1,860.0	2,200.0	2,290.0	
	최소값	255.0	286.0	281.0	300.0	325.0	357.0	376.0	
	최대값	5,690.0	5,680.0	5,470.0	5,320.0	5,060.0	6,060.0	6,260.0	
	N	8	8	8	8	8	8	8	
사회 인프라	평균	430.0	529.0	670.0	531.0	661.0	715.0	970.0	
	표준편차	378.0	521.0	666.0	451.0	531.0	584.0	1,210.0	
	최소값	101.0	0.0	0.0	0.0	110.0	110.0	123.0	
	최대값	1,150.0	1,360.0	1,820.0	1,210.0	1,440.0	1,580.0	3,710.0	
	N	8	8	8	8	8	8	8	
경제 인프라	평균	152.0	121.0	136.0	135.0	159.0	147.0	177.0	
	표준편차	211.0	153.0	171.0	133.0	181.0	142.0	253.0	
	최소값	0.0	0.0	0.0	0.0	6.0	3.8	7.2	
	최대값	619.0	376.0	499.0	293.0	493.0	367.0	762.0	
	N	8	8	8	8	8	8	8	
인도주의적 원조	평균	146.0	117.0	113.0	83.0	133.0	226.0	207.0	
	표준편차	160.0	126.0	134.0	148.0	149.0	227.0	166.0	
	최소값	7.2	0.0	0.0	-84.0	3.1	22.7	32.0	
	최대값	419.0	301.0	299.0	340.0	387.0	572.0	421.0	
	N	7	7	8	8	8	8	8	
생산관련 원조	평균	85.6	82.3	67.7	48.6	71.7	83.4	91.2	
	표준편차	98.1	97.1	78.4	53.6	73.2	76.8	91.6	
	최소값	11.6	0.0	0.0	0.0	11.5	12.5	11.2	
	최대값	289.0	264.0	215.0	130.0	192.0	198.0	227.0	
	N	8	8	8	8	8	8	8	
부채탕감	평균	71.1	52.1	42.3	127.0	26.7	32.8	346.0	
	표준편차	136.0	84.1	90.8	160.0	30.2	44.5	617.0	
	최소값	0.0	0.0	0.0	0.0	0.0	0.0	0.0	
	최대값	345.0	249.0	264.0	351.0	90.6	103.0	1,700.0	
	N	6	8	8	5	8	8	7	

<표 11> 인도주의 원조 (2008-2014)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총 ODA	평균	2,800.0	2,900.0	2,880.0	2,850.0	2,760.0	2,870.0	2,960.0
	표준편차	2,380.0	2,470.0	2,430.0	2,410.0	2,300.0	2,410.0	2,490.0
	최소값	443.0	438.0	409.0	410.0	418.0	429.0	424.0
	최대값	6,700.0	6,360.0	6,530.0	6,200.0	5,770.0	5,830.0	6,470.0
	N	8	8	8	8	8	8	8
사회 인프라	평균	858.0	777.0	722.0	741.0	867.0	767.0	
	표준편차	893.0	589.0	528.0	552.0	819.0	673.0	
	최소값	139.0	137.0	131.0	117.0	125.0	135.0	
	최대값	2,780.0	1,640.0	1,440.0	1,390.0	2,370.0	1,800.0	
	N	8	8	8	8	8	8	
경제 인프라	평균	155.0	173.0	132.0	228.0	173.0	159.0	
	표준편차	156.0	148.0	113.0	292.0	163.0	161.0	
	최소값	9.1	5.2	7.3	6.9	7.3	3.6	
	최대값	426.0	426.0	285.0	838.0	433.0	487.0	
	N	8	8	8	8	8	8	
인도주의적 원조	평균	204.0	203.0	168.0	191.0	188.0	181.0	
	표준편차	157.0	171.0	149.0	160.0	158.0	134.0	
	최소값	33.8	21.9	28.6	27.6	23.5	24.2	
	최대값	399.0	456.0	437.0	496.0	452.0	383.0	
	N	8	8	8	8	8	8	
생산관련 원조	평균	103.0	128.0	149.0	188.0	225.0	233.0	
	표준편차	85.8	122.0	150.0	204.0	292.0	290.0	
	최소값	9.9	16.1	16.5	17.1	18.2	16.2	
	최대값	218.0	348.0	437.0	609.0	720.0	766.0	
	N	8	8	8	8	8	8	
부채탕감	평균	28.0	10.8	71.3	54.5	25.1	2.0	
	표준편차	52.4	10.7	159.0	85.3	56.2	4.4	
	최소값	0.0	0.0	0.0	0.0	0.0	0.0	
	최대값	141.0	25.0	431.0	189.0	126.0	9.8	
	N	7	6	7	6	5	5	

<표 12> 정치 · 외교적 원조 (2000-2007)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총 ODA	평균	4,400.0	4,690.0	4,970.0	5,000.0	5,630.0	6,930.0	7,340.0	
	표준편차	3,350.0	3,320.0	3,630.0	4,350.0	4,010.0	5,320.0	5,570.0	
	최소값	515.0	508.0	556.0	266.0	1,270.0	450.0	454.0	
	최대값	8,470.0	8,530.0	9,120.0	9,880.0	10,300.0	12,000.0	12,500.0	
	N	6	6	6	6	6	6	6	
사회 인프라	평균	805.0	1,180.0	1,410.0	1,500.0	1,570.0	1,400.0	1,910.0	
	표준편차	827.0	933.0	1,030.0	1,180.0	1,290.0	1,030.0	1,550.0	
	최소값	156.0	195.0	246.0	190.0	141.0	149.0	161.0	
	최대값	2,360.0	2,420.0	2,640.0	2,870.0	2,970.0	2,670.0	3,800.0	
	N	6	6	6	6	6	6	6	
경제 인프라	평균	219.0	386.0	309.0	373.0	483.0	486.0	512.0	
	표준편차	258.0	408.0	284.0	317.0	518.0	529.0	594.0	
	최소값	25.2	38.9	14.9	6.4	10.2	35.1	30.3	
	최대값	693.0	1,160.0	817.0	892.0	1,460.0	1,310.0	1,610.0	
	N	6	6	6	6	6	6	6	
인도주의적 원조	평균	133.0	129.0	155.0	179.0	165.0	241.0	262.0	
	표준편차	183.0	155.0	220.0	260.0	204.0	247.0	312.0	
	최소값	6.4	4.4	2.9	1.7	21.8	15.0	8.0	
	최대값	482.0	374.0	544.0	692.0	554.0	653.0	834.0	
	N	6	6	6	6	6	6	6	
생산관련 원조	평균	230.0	221.0	217.0	186.0	192.0	178.0	214.0	
	표준편차	196.0	170.0	154.0	131.0	132.0	128.0	201.0	
	최소값	6.3	13.8	11.7	5.5	5.4	7.3	3.8	
	최대값	486.0	481.0	389.0	329.0	316.0	338.0	584.0	
	N	6	6	6	6	6	6	6	
부채탕감	평균	370.0	526.0	1,010.0	1,280.0	971.0	2,420.0	2,120.0	
	표준편차	522.0	505.0	1,070.0	1,670.0	812.0	2,090.0	1,950.0	
	최소값	1.0	37.0	20.0	9.0	270.0	4.0	0.5	
	최대값	1,410.0	1,400.0	2,650.0	4,380.0	2,520.0	4,660.0	4,510.0	
	N	6	6	6	6	6	6	6	

<표 13> 정치 · 외교적 원조 (2008-2014)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총 ODA	평균	7,460.0	7,750.0	8,470.0	8,010.0	7,540.0	8,100.0	8,170.0
	표준편차	5,220.0	5,350.0	5,920.0	6,150.0	6,430.0	7,320.0	7,700.0
	최소값	591.0	500.0	661.0	689.0	614.0	488.0	416.0
	최대값	13,800.0	12,500.0	14,000.0	13,900.0	13,900.0	17,900.0	18,100.0
	N	6	6	6	6	6	6	6
사회 인프라	평균	2,290.0	2,480.0	2,390.0	2,320.0	2,470.0	2,060.0	
	표준편차	1,580.0	1,790.0	1,830.0	2,020.0	2,410.0	2,180.0	
	최소값	177.0	173.0	170.0	125.0	126.0	145.0	
	최대값	4,440.0	4,720.0	4,670.0	4,930.0	5,800.0	5,670.0	
	N	6	6	6	6	6	6	
경제 인프라	평균	992.0	850.0	1,100.0	868.0	1,170.0	1,170.0	
	표준편차	951.0	713.0	1,470.0	1,130.0	1,430.0	1,710.0	
	최소값	47.5	26.3	86.5	32.4	11.5	16.8	
	최대값	2,400.0	2,080.0	4,020.0	3,010.0	3,070.0	4,310.0	
	N	6	6	6	6	6	6	
인도주의적 원조	평균	253.0	296.0	258.0	269.0	217.0	317.0	
	표준편차	251.0	303.0	232.0	259.0	265.0	425.0	
	최소값	1.1	1.1	0.2	0.5	0.1	0.3	
	최대값	640.0	795.0	610.0	711.0	678.0	1,060.0	
	N	6	6	6	6	6	6	
생산관련 원조	평균	280.0	316.0	494.0	390.0	322.0	281.0	
	표준편차	204.0	236.0	328.0	250.0	302.0	259.0	
	최소값	3.3	4.9	2.2	2.2	1.1	0.7	
	최대값	526.0	620.0	846.0	686.0	711.0	710.0	
	N	6	6	6	6	6	6	
부채탕감	평균	951.0	320.0	519.0	326.0	448.0	189.0	
	표준편차	1,200.0	563.0	647.0	503.0	616.0	264.0	
	최소값	0.9	2.1	3.5	5.0	0.0	0.0	
	최대값	3,250.0	1,460.0	1,760.0	1,330.0	1,630.0	696.0	
	N	6	6	6	6	6	6	

<Abstract>

A comparative analysis of aid volume using three ideologies of ODA

Joe Moon Young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Master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has been a member of the OECD DAC(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 since 2010. So far, as a DAC member, the Korean government has increased the quantity of its ODA. However, controversy on how much Korea should expand its volume of the assistance to reflect the best interests of Korea still exists. This paper addressed this issue, and looked to find lessons from other advanced nations.

Firstly, the paper introduced aid ideology types and the relations between such aid ideologies and determinants of ODA; this means that the ideologies can be treated as one of the determinants of ODA. Then, this paper extended the discussion

on ideologies of aid toward aid volume. As the aid volume of a certain country may be settled by several determinants of aid, the ideologies can also have an effect on aid volume.

With this idea in mind, the paper categorized 22 developed nations including Korea according to the three ideologies, and analyzed the volume of total ODA among the groups using panel regression to find out whether there are gaps among such groups when other variables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a country is controlled. In addition, using panel regression, the paper analyzed the volume of aid and the proportion to total ODA in each of the following sectors of social infrastructure, economic infrastructure, humanitarian aid, production aid, and debt relief. Through this analysis, the paper intended to find if aid ideology itself can affect the volume of total ODA, or have an effect on the volume of ODA in each sector. In addtion, the paper especially focused on the national interest-centered group of countries, due to the fact that Korea is classified as a national interest-centered country.

The results showed that the aid volume of the national interest-centered group of countries ranked first in terms of the total amount of ODA compared to the other two groups. In an additional analysis on specific sectors of ODA and their proportions, it was also found that the group pursuing the national interest has the largest volume of ODA when compared to the other two groups. This can suggest the following: On

surface, national interest-centered ODA seems to have a bad effect on recipient countries because the donor countries in this group are likely to take advantages of beneficiary countries. However, in truth, countries acting upon national interest-centered ideology can have a positive effect on recipient countries if they consider the needs of beneficiaries, as they have already expanded ODA in main sectors including the humanitarian aid sector.

Through this analysis, the paper has attempted to find the strategies and purposes of other advanced nations and find which strategy Korea should take. Hopefully, this will be helpful in recognizing where the current Korean ODA should head in the future.

Keywords : **Aid volume, Ideology of ODA, ODA Determinants, National Interest-centered, Humanitarianism, Political and Diplomatic Interest-centered**

Student Number: 2014-23534